



www.toeic.co.kr / 02)2279-0509

# 국제공인 영어말하기 시험 TOEIC<sup>®</sup> Speaking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측정**

TOEFL, SAT, GRE 등을 출제하는 세계 최대 교육평가 전문기관 ETS 개발  
150개 국가 14,000여 기업이 활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영어시험

**YBM / 한국 TOEIC<sup>®</sup> 위원회**

Copyright © 2014 by Educational Testing Service. All rights reserved. ETS, the ETS logos and TOEIC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Educational Testing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 25



## 2014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25th Anniversary Symposium



- Date: 2014. 5. 29(Thu) 13:00-18:00
- Place: Gwanghwamun Kyobo life BD

**Host**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KAIB)

**Sponsor** YBM 농심 도미노피자 KT&G EAGON



## 존경하는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의 달' 5월에 회원 여러분께 한국국제경영학회 25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한국국제경영학회 창립 25주년으로 금번 심포지움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경영학회 25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다음과 같은 주제와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주제: 한국의 국제화(Globalization of Korea)
- 일시: 2014. 5. 29(목) 13:00-18:00
- 장소: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 주최: (사)한국국제경영학회

금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인의 국제화(전경수 교수, 서울대), 한국사회의 국제화(설동훈 교수, 전북대), 한국국가의 국제화(한충민 교수, 한양대)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프론티어 대상(국제화분야)에는 YBM 민영빈 회장께서 수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2014년도 한국국제경영학회에서 여러분을 자주 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손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김용준(성균관대학교)

25주년 기념 심포지움 프로그램 위원장 김용준(성균관대학교)

25주년 기념 심포지움 프로그램 부위원장 강신애(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14년도 한국국제경영학회 임원진 명단

### ■ 고 문

안태호(인하대)	반병길(서강대)	지용희(서강대)	어윤대(고려대)	정구현(연세대)
민상기(서울대)	조동성(서울대)	하영명(한국외대)	최생림(한양대)	박기안(경희대)
이장호(서강대)	이장로(고려대)	전용욱(우송대)	강호상(서강대)	김 신(경희대)
강태구(전남대)	조대우(충남대)	한충민(한양대)	이광철(홍익대)	이동기(서울대)
이중우(인제대)	이 철(서강대)	신만수(고려대)	박영렬(연세대)	김용덕(숭실대)

■ 회 장: 김용준(성균관대)

■ 차기회장 겸 수석 부회장: 백권호(영남대)

### ■ 부 회 장

권택호(충남대)	김광수(건국대)	김동순(중앙대)	김재범(성균관대)	김주현(차의과대)
김진숙(남서울대)	나원찬(한국외대)	문병준(경희대)	문원석(제주대)	박성연(이화여대)
박영규(성균관대)	박용석(연세대)	송재용(서울대)	안동규(한림대)	안세영(서강대)
윤동진(우석대)	이재혁(고려대)	이형오(숙명여대)	장세진(KAIST)	정창영(서울시립대)
정태영(홍익대)	채명수(한국외대)	표정호(순천향대)		

### ■ 상임이사

강신애(서울과기대)	고경일(백석대)	곽주영(연세대)	권종욱(강원대)	김명숙(서울여대)
김종훈(인천대)	김주권(건국대)	김창수(서강대)	김학균(성균관대)	박남규(서울대)
박병일(한국외대)	박종훈(서강대)	방호열(부산대)	신상헌(계명대)	신형덕(홍익대)
안중석(전주대)	오세경(건국대)	오준석(숙명여대)	이강표(서강대)	이건희(영남대)
이병희(한양대)	이웅희(한양대)	이현식(강릉원주대)	임달호(충북대)	장호윤(한성대)
전병준(중앙대)	정인식(고려대)	정진섭(충북대)	최순규(연세대)	하태형(수원대)

### ■ 이 사

권기환(상명대)	김경찬(포스코)	김광현(고려대)	김기현(영남대)	김민숙(계명대)
김병구(대전대)	김보영(한양대)	김봉진(이화여대)	김성호(협성대)	김성훈(울산대)
김정포(부산외대)	김주원(성균관대)	김주태(단국대)	노은영(성균관대)	문정빈(고려대)
문철주(동아대)	박석호(목포대)	박재찬(한라대)	박주희(계명대)	배준영(부경대)
변재웅(계명대)	손정민(인제대)	양오석(강원대)	오한모(전북대)	우원석(이화여대)
원성권(관동대)	윤정희(세명대)	이남석(중앙대)	이성봉(서울여대)	이영일(부산외대)
이재호(경희대)	이지환(KAIST)	임형록(한양대)	장영봉(성균관대)	전용복(경성대)
정선욱(서강대)	정재호(고려대)	정창화(고려대)	조대원(대진대)	조승호(숭실대)
최경규(동국대)	최낙섭(SK연구소)	최성진(한양대)	최순권(부경대)	최준환(강릉원주대)
최진아(명지대)	최창범(중앙대)	최창미(충남대)	편주현(고려대)	표민찬(서울시립대)
한병섭(전남대)	현재훈(한국외대)	홍덕표(LG경제연구원)		

■ 감 사: 김경원(경기대) 설원식(숙명여대)

■ 편집위원장: 박용석(연세대)

■ 사무국: 강신애(상임간사) 김학균(상임간사) 노은영(사무국장) 서현영(사무부국장)



## 한국국제경영학회 25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정표

- ◆ 날짜: 5월 29일(목) 오후 1시~6시
- ◆ 장소: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 ◆ 프로그램

시 간	행사내용
13:00-14:10	<b>개회식</b>
	축 사 : 지용희 교수(서강대)
	<b>세션1. 한국인의 국제화</b> (사회자: 박성연 교수(이화여대))
	발 표 : 전경수 교수(서울대)
14:20-15:30	토 론 자 : 이건희 교수(국민대)
	심상복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한양대 특임교수)
	<b>세션2. 한국사회의 국제화</b> (사회자: 안동규 교수(한림대))
	발 표 : 설동훈 교수(전북대)
15:30-16:00	토 론 자 :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홍인표 국제에디터(경향신문 부국장)
	김윤태 한중미래연구소 소장(동덕여대교수)
	<b>글로벌 프론티어 대상(국제화분야) 수상 및 수상소감</b>
16:10-17:20	사 회 : 강신애 교수(서울과기대)
	공 적 서 : 문병준 교수(경희대)
	수 상 자 : YBM 민영빈 회장
17:20-18:00	<b>세션3. 한국국가의 국제화</b> (사회자: 하태형 원장(현대경제연구원))
	발 표 : 한충민 교수(한양대)
	토 론 자 : 어윤대 교수(고려대)
	강인선 부장(조선일보)
17:20-18:00	<b>종합토론</b>
	사 회 : 김용준 교수(성균관대)

※ 심포지움 후 그랑서울 타워에 있는 "수하동"에서 저녁식사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목 차 -

### Session 1

사회자: 박성연 교수(이화여대)

#### ■ 1. 한국인의 국제화 ..... 3

- 발표자: 전경수 교수(서울대)
- 토론자: 이견희 교수(국민대), 심상복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한양대 특임교수)

### Session 2

사회자: 안동규 교수(한림대)

#### ■ 2. 한국사회의 국제화 ..... 13

- 발표자: 설동훈 교수(전북대)
- 토론자: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홍인표 국제에디터(경향신문 부국장),  
김윤태 한중미래연구소 소장(동덕여대교수)

### Session 3

사회자: 하태형 원장(현대경제연구원)

#### ■ 3. 한국국가의 국제화 ..... 37

- 발표자: 한충민 교수(한양대)
- 토론자: 어윤대 교수(고려대), 강인선 부장(조선일보)





# 논문발표 Session 1

## Session 1: 한국인의 국제화

사회자: 박성연 교수 (이화여대)

### ■ 1. 한국인의 국제화

- 발표자: 전경수 교수(서울대)
- 토론자: 이건희 교수(국민대), 심상복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한양대 특임교수)



# 한국인의 국제화

전 경 수

서울대학교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y 29, 2014



## 공생의 경영인류학: 왜, 어떻게 ?

팽창은 반대급부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지나친 팽창이나 속도조절을 하지 못한 팽창은 폭발로 이어지는 반대급부를 보여준다. 또 다른 반대급부는 역류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국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람은 쌍방소통을 하는 동물이지 일방통행에 길들여지지 않는 종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호모 커뮤니카투스(Homo communicatus)라는 용어를 제작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 주인공 노릇을 하였던 국가들이 식민지와 점령지를 획득하는 팽창을 시도하였지만, 그 반대급부는 팽창의 역류 현상으로 이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은 팽창에 대한 전략과 관리에 역량이 없었다. 그들은 사람이 쌍방소통을 하는 종이라는 점을 망각하였던 것이다. 팽창하는 만큼 역류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한계였다. 역류에 대한 전략과 관리도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팽창에 급급하였던 제국주의자들이 반대급부인 역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을 쓸 여력도 없이 제국주의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팽창의 흐름 속에서도 살았지만, 역류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흐름의 한 줄기가 노동인력과 결혼이민의 세계화로 인식될 수 있다.

1960년대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갔던 광부와 간호원들의 입장을 지금 와서 평가한다면, 그것은 다른 아닌 노동인력의 세계화였다. 그들 중의 많은 수는 현지에서 결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살림도 차려서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반성도 채 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의 노동인력들이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였던 과정은 이제 역류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림을 차려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균형잡힌 연구와 평가가 절실한 시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울이나 지방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서 노동인력의 양방 흐름을 직감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외국의 기업들이 수출 공단이라고 지정된 특수 지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국제간의 노동과 기업의 교류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공장과 회사를 제3세계뿐만이 아니라 소위 산업과 공업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등지에도 건설하여, 그들의 인력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기업과 노동인력의 세계화는 전방위로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바라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점은 변화의 속도이다. 한 세대만에 팽창과 역류가 진행되는 모습은 인류 역사상 유래없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이라는 점만큼은 받아들여야 한다.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한 팽창은 반드시 폭발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경험들이 역사적 사실로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한국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곳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착안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경영학자와 사회학자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추진한 것이 본 연구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연구문제는 자못 심대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보잘 것 없는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 결과가 문제의식을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점에 만족하면서, 나는 경영인류학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다. 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경영학이 담당한다는 고정 관념의 벽을 깨고, 기업이라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학제적으로 조명하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한국기업이 다른 사회의 타문화 속에서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문제의식을 설정한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정신이다.

물론 정부의 관련 연구 단체나 주요 기업의 연구소들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의 단계로 여러 가지의 보고서를 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나온 대부분의 연구들에 대한 한 마디로써의 평가가 허락된다면, 그것은 균형 감각의 상실이었다. 외국이라는 현지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제대로 문제의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자기중심적인 타자화와 도구화라는 기본적인 관점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타문화와의 만남이라는 장에서 한국기업이 어떠한 문화적 적응을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시각과 방법에 의해서 문제의식의 기본 정신이 변질되고, 그 결과 문화적응이라는 상황에서 상당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학 협동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이 봉착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의 발견과 해결점의 제시가 學 쪽에 있음을 절감한 우리들은 캠퍼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기업과 함께 뛰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본 연구의 착수를 기획하였다.

아직 학제적 연구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학문 분야들간의 공조 체제를 갖춘다는 현상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점도 전제로 하고,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문화적응이라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영학, 사회학, 인류학에서 훈련을 받은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감당하였다. 사실 나는 “고전적”인 의미의 학문 분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학문들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그에 관련된 현상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학적 인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학적 인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류학적 인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역지로 인간의 현상을 특수한 학문에 끼워 맞추어서 보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그리고 원천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나는 경영인류학이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이란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현상의 하나라고 파악한다면, 인류학자로서 경영인류학이라는 문제의식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큰 무리가 아니다. 나는 무역인류학이라는 단어도 만들어 보았다. 이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경제라는 것은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작용한다면, 학제적 연구의 시도는 때늦은 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재택 근무를 통하여 가정과 기업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는 판에, 학계와 산업계의 벽은 더더욱 불필요한 것이다. 상아탑의 이미지를 가장한 학문의 안주는 자기 파멸의 묘혈을 팔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사실상 이미 엄청나게 저질러진 軍産複合 문제의 이면에는 學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고, 식민지 경영에서 동원된 학계는 軍學複合이라는 현상도 만들어낸 것이 인류의 역사다. 문제는 학계라는 집단의 위선성에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과감하게 가면을 벗어 버리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 가면을 벗는 방법 중 하나가 학제적 연구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응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도 학문 분야별로 차이를 보인다. 경영학과 사회학은 비교적 거시적인 접근을 하였고, 인류학은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경영학과 사회학에서는 통계를 비롯한 기존의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을 시도하였지만, 인류학에서는 심층적인 문화 이해라는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이라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지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관찰하였다. 그러나 작업의 일단락이 지어진 상황을 맞은 현재, 나는 개별 학문 문화 간의 적응도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해외 진출,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다국적 기업 혹은 초국적 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996년 상반기 현재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의 국회도서관(NOLIS)에 수록된 국내 문헌의 경우 석·박사학위 논문 175개, 단행본 29개, 저널수록 논문이 332개에 이른다. 그런데 그 많은 논문들 중 경영학·사회학·인류학자의 공동 연구는 하나도 없다. 학제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는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 문헌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 사회학·인류학 문헌이 발견될 뿐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응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실재 현상을 인식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장·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 사회 혹은 현지인 종업원 사이의 갈등이 현지 사회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와 관습법규 등을 충분히 고려한 바탕 위에서 투자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현지 종업원과의 관계에서는 현지의 노사 관계 관행을 존중하는 경영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의 현지화라는 문제가 절박한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점도 본 연구의 시의적절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 현황, 해외 투자의 동기 및 연혁, 현지 종업원과의 관계, 현지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문 분야별로는 현지 사회와 한국 문화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현상의 조명이 기대되기도 하고, 현지 사회의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필요성의 제고를 기대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였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현지 사회와의 적응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의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경우 국내에서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한국인 직원과 현지 사회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여 일체감을 가진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 과제라고 한다면, 기업의 현지 적응이란 다름 아닌 문화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한국기업의 경영 관행을 현지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영 문화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주제는 경영학자들에 의해서만 수행되기 보다는 사회학·인류학자와 학제적 공동 연구를 통해서야만 비로소 그 복합적 성격을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한 국가를 선택한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한국기업의 진출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고, 진출 분야(제조업·건설업·삼림개발 등)가 다양하며,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진출하고 있고, 해외 투자 기업뿐 아니라 토착적 기반을 둔 한국인 소유의 기업도 있는 등 양상이 나름대로 다채롭고, 현지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또 다른 이유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환경을 보이는 기업진출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은 관점과 항목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즉 공동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구비한 문제의식과 연구질문들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견지하였다. 물론 학문분야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연구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연구자들이 공유하였던 연구질문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 과정에 관한 사항** : ① 해외 진출의 동가·과정·현황 등 현지 기업의 역사  
 ②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한국 시장 상황과의 관계(배출 요인) ③ 당해 정부 혹은 사회와의 관계(흡인 요인). 2) **해외 투자 기업의 인사 제도 및 근무 환경** : ① 채용 ② 조직 및 배치 ③ 교육 훈련 ④ 급여 체계 ⑤ 복지 후생 ⑥ 능력 및 성과 평가 ⑦ 승진·승격·승급 관리 ⑧ 근무 여건 ⑨ 고용해지 ⑩ 안전 및 환경 관리. 3) **한국기업과 현지 사회, 한국인 직원과 현지인 종업원간의 상호작용 패턴** : ① 한국인 직원의 현지인 종업원에 대한 평가 ③ 한국인이 보는 현지 사회의 특성 ④ 현지인(언론/사회 단체/정부 관리/일반인)이 보는 한국기업·한국문화(한국인 직원의 가족 등)의 특성 ⑤ 노사분규 등 갈등 사례, 현지 사회와 융화에 성공한 사례.

이상의 연구질문과 연구항목이 얼마나 심도있게 다루어졌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연구질문의 정신을 견지하고, 인류학자의 안목에 적합한 항목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결과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완성된 결과를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 자체로서 몇 가지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첫째, 해외 각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문화적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한 생각의 단초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자료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현상에 대한 균형잡힌 문제의식과 방향을 설정함에 보탬이 되는 시각과 관점의 제시에 기여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력의 국제 이동이 활발한 현재와 그러한 현상이 주류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미래 한국 사

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현지 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의 연구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합리적 관리 방안 모색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위에 제시하였던 연구질문과 연구관점에 입각한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서 몇 편의 논문들과 보고서들이 생산되었다. 본서는 그러한 과정의 일환인데, 세월이 경과한 지금 나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였다. 인류학이란 학문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문제를 토론하고 함께 현장을 답사를 하였던 경영학자들은 끊임없이 “관리”(management)를 내세웠다. 효율적인 관리가 경영학의 주춧돌이라는 논리였다. 사회학자도 마찬가지였다. 관리? 무엇을 위한 관리인가? 관리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이러한 질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공동연구에 참여할 당시, 인류학자에 부여된 암묵적인 임무는 문화이해라는 키워드였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통인식이 내재되었기에 인류학자가 참여하는 연구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국제경영의 맥락을 생각하면서 문화라는 항목을 중시하는 경영학자들은 비즈니스 맥락에서 “문화가 문제다”(Moran et al. 2007: 3)라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글로벌 리더십 전략과 비즈니스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고, 그러한 문제의식은 국제경영학 분야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다. 문화차이관리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대전제이다. 기업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기업이 겪는 문화충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던 김중순 박사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자체가 자동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는 점”(김중순 2001. 5. 20: 334)을 강조하였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동적으로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즉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영이라는 문화현상도 수단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애기이지 목적의 차원에서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뻔히 보인다는 애기다.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의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관리, 즉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목적이 국제경영의 비즈니스 맥락에서 전개되는 관리에 있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헤게모니의 문제를 지향하고 있는 경영학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이 지향하는 문화라는 것은 지극히 도구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학자가 해야 하는 작업이 문화이해라고 한다면, 왜 문화이해를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봉착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화이해가 인류학자의 궁극적 목적인가? 나는 그렇게 배웠다. 인류학 서적들은 거의 모두 그렇게 적고 있으며,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다. 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원천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경영학자들과의 공동연구 덕분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원자력을 발견한 공학자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 질문이 잘 못 되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답변이라도 해야 한다. 사람은 쌍방소통을 하는 호모 커뮤니카투스라고 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모 커뮤니카투스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문화이해가 인류학이란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최종심급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개념은 아직도 진화해야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인류학이란 학문이 목표로 해온 “문화이해”는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관리”를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도구적인 사고방식이 젖어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지극히 식민주의적 관점이 배어 있는 안목인 것이다. 인류학을 들여다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모두 이러한 관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인류학을 ‘제국주의의 시녀’라고 설파하였던 목소리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것이었다. 그것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문화이해의 목적이 관리를 위함이라면, 나는 이제 단호하게 인류학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만한 경영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인류학의 문화이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재검토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관리라는 문제의식에 동참하면서 인류학자는 ‘경영인류학’이라는 틀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의식이 여기서 정지한다면, 인류학이란 학문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즉 관리를 위한 문화이해가 목적인 인류학은 다른 작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으로 견지하지 않으면, 학문으로서의 존재이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 관리란 식민주의(colonialism)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학이란 학문이 식민학(colonial studies)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시대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책을 위한 식민학으로서의 인류학이라는 틀에 대한 유혹은 인류학이 시작된 이래로 항존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학이란 학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관리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면, 인류학은 무엇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가? “진리탐구”라는 답변은 허공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공생”을 제안한다. 인류학이란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생주의(commensalism)의 발견이다. 인류학이 추구해온 문화이해는 공생을 위한 것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업무현장에서 벗어지는 갈등이 문화이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은 인류학자의 노력으로 공생을 시도하자는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흔히 “원-원”이라는 소리는 듣는데, 그것은 허울좋은 입발림이다. 열역학이 지배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궁극적으로 “제로-섬”게임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원”은 제한적인 공간내에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구의 열역학이 담보한다. 상생으로 번역되는 ‘원-원’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이지만, 공생은 “함께 살아보자”라는 것이다. 상생은 공생으로 가는 중간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종착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함께 살아보자는 의지의 표현이 공생주의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원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공생이다. 말리노브스키 선생의 “쿨라”모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멜라네시아 섬 사람들의 공생주의였다고 생각한다. 생태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자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살아보자는 것이 공생주의다. 다름을 전제하고, 다른 것들끼리 만나서 함께 살아보자는 것이 공생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자본주의(capitalism)의 한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이때 공산주의(communism)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사회의 진화과정은 비가역적이라는 점이 이미 익히 밝혀졌고, 공산주의가 제시하였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학습된 경험이 있

다. 제삼의 길, 그것의 가능성은 공생주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민주의를 벗어 던지고 공생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인류학이란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영학자들과의 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영학과 인류학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리가 경영학의 목표라면 인류학의 목표는 공생이다. 그래서 경영인류학의 목표도 관리가 아니라 공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수 있다. 문화이해는 공생을 위함이지 관리를 위함이 아니라는 도식이 성립할 수 있다.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의 목적이 공생에 있는 인류학자의 입장과 경영학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공생이라는 키워드가 경영학의 목표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인류학과 경영학 사이에 현존하는 벽을 허물 준비가 되어 있다.

## 참고문헌

김중순. 2001. 5. 20 문화를 알면 경영전략이 선다. 서울: 일조각.

Moran, Robert, Philip Harris, Sarah Moran. 2007 *Managing Cultural Differences: Global Leadership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7th ed.). Burlington, MA: Elsevier.





# 논문발표 Session 2

## Session 2: 한국사회의 국제화

사회자: 안동규 교수(한림대)

### ■ 2. 한국사회의 국제화

- 발표자: 설동훈 교수(전북대)
- 토론자: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홍인표 국제에디터(경향신문 부국장),  
김윤태 한중미래연구소 소장(동덕여대교수)



# 한국사회의 국제화: 이민자 유입의 정치경제학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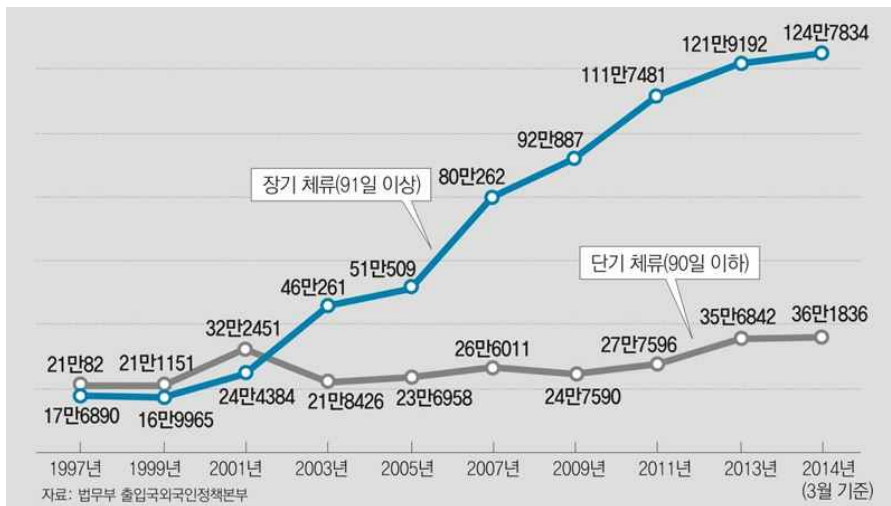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y 29, 2014

## I. 문제 제기

한 동안 한국은 자국 인구를 해외로 송출하는 나라였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순차적으로 한국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이민사회로 바뀌었다. 한국은 같은 종족을 배경을 가진 동질적 사회에서 여러 문화, 종족이 어우러져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그림 1 참조).

2012년 말 기준 한국에는 199나라에서 온 외국인 144만 5천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들 중에는 관광객이나 방문자 등 일시 체류자도 있지만, 취업, 결혼, 거주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온 이민자가 많다.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 1997-2014년

저숙련 이주노동자, 고숙련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사증 소지자, 영주자 등 한국에 온 목적이 제 각각이고, 그 인구 규모도 차이가 난다. 체류자격별 이민자 규모는 한국의 각종 시장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 전체를 고려할 때 송출 가능한 인구는 무제한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므로, 한국내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그것을 규제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노동시장, 결혼시장과 같은 경제적 요소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이민 수용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이 한국에 이주한 목적, 즉 체류자격에 따라 그들의 출신국 분포가 상이하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저숙련 인력 수입 제도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특정국 출신에 대해서만 이주의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나라들 출신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봉쇄하는 정책을 펴다. 그 경우, 출신국별 이민자

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한국 정부의 제도인 것이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민 시장에서도 공급자와 구매자 중 어느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가가 중요한데, 저숙련 인력의 경우 한국이 구매자로서 공급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한다. 저숙련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수요자 주도의 시장에서는 이민자 수용 국 정부의 이민 제도가 영향을 강하게 미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들 중 주요 부분집단별로 그들의 이민을 규제하는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제도 변수만으로 한국의 복합적 이민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와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과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몇몇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국내외의 개인들 또는 가족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한국인 남성이 그의 배우자의 출신국을 고르는 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 또는 가족의 선택이 될 것이다. 물론, 그가 국제결혼 중개를 알선하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경우 그 브로커가 가진 국제적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개인 또는 가족의 선호와 브로커의 네트워크 등에 의해 배우자의 출신국이 결정될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처럼 한국 정부의 출신국별 쿼터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조차도, 따지고 보면, 사용자의 선호도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 경제적 변수가 이민자의 출신국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어느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주로 오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정치 경제적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 II. 이민자 총원 제도 및 유입 메커니즘

한국의 외국인 이민자를 주요 세부집단별로 구분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민 제도 또는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 이민자 집단의 규모가 큰 집단을 이주노동자와 정착이민자의 둘로 구분하고, 그것을 각각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고숙련 이주노동자로,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체류자 및 영주자로 나누었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그 집단 규모가 매우 크고, 또 그 구성이 이질적이므로, E-9(비전문 취업) 사증 소지자와 H-2(방문취업) 사증 소지자로 구성되는 합법 취업자, 그리고 서류미비 이주노동자로 분류하였다. <표 1>은 한국의 주요 세부 집단별 이민자들의 출신국별 구성을 보여준다.

## 1 이주노동자

### 1) 저숙련 이주노동자

한국의 이민자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저숙련 이주노동자다. 2012년 그 수는 595,423명이었다(표 1 참조). 그들은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법적 외국인노동자로, 비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있다. 2012년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소지한 이주노동자 수가 184,229명, 후자인 방문취업(H-2) 사증 이주노동자 수가 233,340명에 달했다. 아울러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수는 177,854명이 있는데, 그 수는 E-9 이주노동자 보다 6,375명만큼 적었다.

<표 1> 한국의 이민자 수, 2012년

출신국	이주노동자							경곽이민자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1,062,424	641,892	595,423	184,229	233,340	177,854	46,469	420,532	148,498	187,894	84,140
호주 Australia	5,084	994	329	0	0	329	665	4,090	322	3,681	87
방글라데시 Bangladesh	12,418	12,020	11,873	7,249	0	4,624	147	398	367	0	31
캄보디아 Cambodia	23,776	19,139	19,127	17,429	0	1,698	12	4,637	4,541	0	96
캐나다 Canada	19,290	4,905	748	0	0	748	4,157	14,385	1,240	12,715	430
중국 China	543,329	306,611	297,061	4,735	222,534	69,792	9,550	236,718	63,035	116,452	57,231
프랑스 France	955	423	78	0	0	78	345	532	241	216	75
독일 Germany	1,535	397	101	0	0	101	296	1,138	199	848	91
인도 India	3,191	2,978	1,024	37	0	987	1,954	213	158	1	54
인도네시아 Indonesia	30,385	29,639	29,435	23,238	0	6,197	204	746	525	97	124
이란 Iran	856	731	687	0	0	687	44	125	105	5	15
일본 Japan	21,796	2,793	1,058	0	1	1,057	1,735	19,003	11,746	746	6,511
카자흐스탄 Kazakhstan	2,005	1,003	977	0	565	412	26	1,002	221	702	79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2,575	1,873	1,864	993	234	637	9	702	513	111	78
라오스 Laos	311	161	143	0	0	143	18	150	147	0	3
몽골 Mongolia	17,787	15,014	14,747	6,067	0	8,680	267	2,773	2,395	0	378
미얀마 Myanmar	8,456	8,378	8,358	7,078	0	1,280	20	78	75	0	3
네팔 Nepal	17,740	16,681	16,369	14,481	0	1,888	312	1,059	1,027	0	32
뉴질랜드 New Zealand	2,751	742	147	0	0	147	595	2,009	226	1,729	54
파키스탄 Pakistan	7,130	6,259	6,121	2,903	0	3,218	138	871	787	0	84
필리핀 Philippines	36,540	26,507	23,524	9,908	0	13,616	2,983	10,033	9,611	13	409
러시아 Russia	7,344	2,503	1,992	0	994	998	511	4,841	1,328	2,727	786
스리랑카 Sri Lanka	21,545	21,320	21,296	17,757	0	3,539	24	225	217	0	8
대만 Taiwan	15,628	1,097	914	0	0	914	183	14,531	573	42	13,916
태국 Thailand	35,489	32,249	31,918	14,327	0	17,591	331	3,240	2,618	5	617
동티모르 Timor-Leste	1,008	1,008	1,008	914	0	94	0	0	0	0	0
영국 United Kingdom	4,056	3,005	109	0	0	109	2,896	1,051	625	284	142
미국 United States	64,185	17,095	3,338	0	1	3,337	13,757	47,090	2,653	43,592	845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32,826	27,442	27,336	13,854	8,853	4,629	106	5,384	2,017	2,874	493
베트남 Vietnam	110,086	69,675	68,919	43,254	0	25,665	756	40,411	39,352	0	1,059
기타 Others	12,347	9,250	4,822	5	158	4,659	4,428	3,097	1,634	1,054	409

주: (1) 전체 이민자 = (2) + (8)  
 (4)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 (5) 이주노동자 = (3) + (7)  
 (6) 방문취업제 이주노동자 (3) 저숙련 이주노동자 = (4) + (5) + (6)  
 (7) 고숙련 이주노동자 (8)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9) 경곽이민자  
 (10) 제외종류 사증(F-4) 소지자 (11) 영주자

###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도입 대상국 선정과 연간 E-9 사증 쿼터 할당

한국 정부는 국내 사업주의 인력 수요와 외교적 판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노동자 도입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기타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력 도입 대상국과 업종 및 인원을 정한다.

한국 정부는 송출 희망국의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연령,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 기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인력 송출 계약 체결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와 MOU를 체결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는 MOU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꾀하여, 각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이 외국인력 도입 MOU를 체결한 나라는 15개다. MOU 체결 순서대로 그 나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2003-2005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의 다섯 나라와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에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에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의 다섯 나라와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 정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송출국별로 MOU 이행 여부를 평가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05년 송출비리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일시적 송출 중단의 불이익을 당하였다. 그렇지만 그 제재는 일정 기간 후 풀렸고, 그 후 인도네시아는 정상적으로 자국민력을 한국으로 송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 말 이전에 공표하고 있다. 2014년 E-9 사증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53,000명인데, 기존 인력 대체 인원 27,400명, 추가 도입 인력 25,600명이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제조업은 모든 나라에서 도입하지만, 외국인노동자 도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종은 업종별 특성과 사업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수업종 특화국가를 지정하였다. (1) 건설업: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2) 어업: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스리랑카, 필리핀, (3) 농축산업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서비스업 몽골,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한국의 국내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도입 인력 쿼터 총수를 확정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할 때에는 노동시장 통계를 활용해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값을 조정한다. 외국인력 수요는 (1) 노동시장 내 부족인력 중 외국인력 규모와 (2) 기존 이주노동자 출구에 따른 대체 수요 등으로 산출하고, 경기 상황 반영은 (1) 경기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 변화, (2) 내국인 취업 가능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인력부족률 통계로 파악한다. 그 후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를 다섯 개 업종, 15개 송출국 별로 구분하여 배분한다. 한국정부가 그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들은 (1) 외국인노동자 고용 경험에 있는 사업주와 관리자의 출신국별 선호도, (2) 각국의 이주노동자 송출과정의 투명성, (3) 출신국별 사업장 이탈률, (4) 외국인노동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5) 외교 관계와 경제적 국제 협력 등이다.

필자가 2008년 노동부의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 관리자의 외국인노동자 선호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등의 순이었다(Seol 2008: 6). 고용허가제에서는 송출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면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출신국을 적합한 인력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신호(signal)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다른 요인도 고려하므로, 출신국별 E-9 사증 이주노동자 쿼터가 사업주 선호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 발급과 연간 H-2 사증 쿼터 할당

방문취업 사증은 외국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저숙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주로 중국과 구 소련 출신의 한국계 외국인들은, 단순 노무행위 등 저숙련 직종 취업이 금지되는 재외동포(F-4) 사증 대신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온다.

H-2 사증은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 출신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친척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등 한국 내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되고, 일부는 한국말 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H-2 사증은 공식적으로는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 업무연락, 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음식점업, 가구내 고용 활동 등 38개 업종에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H-2 사증 소지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안마,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만 규제될 뿐 나머지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그 경우 취업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부여된다. 그러나 그들 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고용개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신규 도입 인력 쿼터 총수를 확정하면서, 일반 고용허가제와는 별도로 H-2 사증 발급 쿼터를 정한다. H-2 사증 발급 쿼터는 그 사증 소지자의 국내 체류 인원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의 H-2 사증 소지자 stock 상한을 30만 3천 명으로 정하였다. 동시에 한국 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월별 사증 발급 건수를 조절한다.

한국정부는 H-2 사증 발급 시 외국국적동포의 출신국별 쿼터는 부여하지 않는다. H-2 사증 체류자 수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H-2 사증 체류자 수는 233,340명인데, 중국 출신이 222,534명으로 94%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2012년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수 177,854명 중 31%는 E-9 사증으로 입국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취업자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가 허용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는 지정된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다. 한국정부는 송출국 정부와 체결한 MOU에 불법체류자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불법체류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 심각한 송출비리가 발생하거나 특정 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자 비율이 전체 송출국가들 평균 이상일 경우, 한국 정부는 특정 송출국의 구직자 명부 규모의 축소, 이주노동자의 일시적 총원 중단, 또는 MOU 효력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머지 69%는 기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불법체류자 중 최대 집단은 단기체류자격 소지자들이다. 단기방문(C-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의 44%다. 그들은 대부분 출신국에서 불법이민을 알선해 주는 조직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진입한다. 한국정부는 불법체류가 우려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브로커의 도움

을 받은 외국인들은 그 규제 망을 쉽게 통과하고 있다. 브로커 조직은 국내에 연락책을 두고, 외국인들의 취업까지 불법적으로 알선하고 있다.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버는 상대적 고임금을 찾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몰려오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 25%는 결혼(F-6), 방문취업(H-2), 일반연수(D-4)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증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합법 입국, 체류, 취업이 가능한 통로는 모두 활용한다. 위장결혼 브로커들은 자신의 고객에게 한국인을 소개하여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한국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입국시켜 취업까지 알선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는 국내 방문 취업 또는 연수가 허용되는데, 재외동포 관련 브로커들은 그러한 제도를 이용한다. 유학 등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는 브로커들도 다수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저숙련 직종에 취업하여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한다. 그들은 국내 저소득층과 동일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상시적으로 전개하지만,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수의 총량은 인력부족률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 경기 동향 및 정부의 단속정책 등과 관련이 있다. 서류미비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분포는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한국과의 발전 격차, 자국에서의 취업 기회 등 시장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자국 정부의 해외 불법체류에 대한 통제적 강도 등 정책적 요인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고숙련 이주노동자

고숙련 이주노동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즉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신청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고숙련 이주노동자는 고용계약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 해당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한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2011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재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 쿼터, 내국인 구인 노력을 다한 사용자에게만 외국인 고용을 추천하는 노동시장 심사(labor market test) 절차, 체류기간 연장 또는 사증 갱신 횟수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인도,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IT, BT 등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 절차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경력 요건을 면제하여, 한국에서 취업하는 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고숙련 이주노동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그들은 한 번 사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사증유효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다.

한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숙련 이주노동자 유치 지원에 나섰으나 그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2012년 그 수는 46,469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회화지도가 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특정활동(E-7) 30%, 예술·홍행(E-6) 9% 등의 순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국내 체류 전문직 종사 외국인 중 학력, 소득 등 역량, 자질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합법적으로 5년간 체류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그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2년이 경과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에서 정착을 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숙련 이주노동자의 총수는 그들을 고용하는 조직의 경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기업이나 대학이 대부분인데, 국제경쟁력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숙련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항시적으로 존재하나, 정착 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당근”, 즉 고임금과 좋은 생활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지구적 우수인재(global talents)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외국어 강사, 기능공(technicians)인 특정활동 사증 소지자, 그리고 예술·홍행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들의 출신국 분포는 직종과 관련이 크다. 외국어 강사는 언어 교육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구사 나라 출신이 대부분이고, 특정 자격 사증 소지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나라 출신이 다수 있고, 예술·홍행 종사자는 필리핀 출신이 많다.

## 2. 정착이민자

### 1) 결혼이민자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결혼을 매개로 하여 이민 온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순수혈통에 기반을 둔 단일민족 개념을 신봉해 온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05년의 경우,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3.6%인 43,121건이 국제결혼이었다. 정부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한 2006년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줄어들었다. 2013년 국제결혼 건수는 25,963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8.0%였다. 그렇지만 국제결혼은 이미 10년 이상 총 결혼 건수는 5%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 정도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결혼 가운데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한 비율이 그 반대 경우보다 단연 높다. 그것은 남아 선호로 인한 선별 낙태가 약 30년간 지속되어 결혼시장에서 신부 부족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결혼압박(marriage squeeze)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남성들이 강한 결혼 압박을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외국으로 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지만 한국 여자들이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유형도 있다. 외국인 남자들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전문기술직 종사자 또는 유학생이 대부분이다. 사회계층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은 최상층과 최하층 집단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국제결혼 배우자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 또는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의 국

국제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 남자와 중국 또는 아시아 저개발국 출신 외국 여자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인의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부를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김현미 2008), 몇몇 농촌지역의 지방정부에서 국제결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을 근거로 주장한 것에 불과할 뿐, 중앙정부에서는 국제결혼 자체를 장려하지도 않았고, 또 억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2000년대 초부터 결혼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정부는 2004년부터 그들을 한국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국제결혼에 개입한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것은 자유업이던 국제결혼중개업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에 이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수준을 가진 한국인이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국제결혼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대신,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결혼이민자 사증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2012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당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29%, “스스로” 23%,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가 각각 20%, “종교 기관을 통해서”가 6%, “기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2013: 189-191).

결혼이민자들이 이주의 목적지로 한국을 고르게 된 데에는 선진 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적 거리가 줄어든 탓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역할이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외국 현지의 결혼중개업자들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종 형태의 맞선을 알선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나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는 데 직접적 역할을 한 사람이 그들이라는 뜻이지,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가 전혀 끼어들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09년과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결혼 중개업체”나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 등 기존 국제결혼의 주요 통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줄어든 반면,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또는 “스스로” 배우자를 만났다고 응답한 사람이 증가하는 등 국제결혼 통로가 다변화되고 있다. 여행, 유학, 취업 등을 통한 한국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만나는 기회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전문기술직 종사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 저숙련 이주노동자가 대다수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등의 나라 출신이 많다. 어쨌든,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는 앞에서 살펴본 저숙련 합법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정책이나 제도에 따른 효과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결혼시장 관련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나 부모의 한 명 또는 조부모의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에게 발급한다. 1999년 9월 2일 법률 제6015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내국인과 거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F-4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국내 거소(居所) 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3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부동산 매매와 국내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단순노무, 사행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출신 동포들이 F-4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모,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중국 또는 구소련 출신 동포가 F-4 사증을 받으려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나 임원, 매출액 10만 달러 이상의 개인기업가 등이어야 한다. 그 결과, 중국 조선족 또는 구소련 고려인은 한국에서 F-4 사증 대신에 H-2 사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 출신 동포는 거의 모두가 F-4 사증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중국과 구소련 동포 중 국내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H-2 사증을 발급받기도 로토 복권에 당첨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동포들 내부의 제도적 차별은 위계적 민족성의 한 사례로 지적된다.

한편, 2000년대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H-2 사증 소지자가 F-4 사증으로 사증을 변경하는 길은 봉쇄되어 있었다. 2008년 한국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사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 사증으로 변경하는 길을 열어두었다. 그 후, 중국 조선족이 재외동포 사증을 취득하는 길이 열리면서 그 수는 급증하였다. 2012년 F-4 사증 소지자 수는 187,894명이었는데, 중국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출신으로 그 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 3) 영주자

한국정부는 영주(F-5) 체류자격을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하여도 좋을 것으로 인정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영주 체류자격은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신설되었다. 영주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은 상한선 없이 신분 존속기한으로 한다.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1년이 초과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활동범위 면에서, 영주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취업제한이 없으며,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는다. 영주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 되지 않는다.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의 취업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주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내에서 약 100년 간 생활한 대만 국적자들이 영주권자의 대부분이었다. 그 후 국제결혼이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자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국내 외국인 영주권 정책이 2008년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였다. 정부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주 화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 외국국적동포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였다. H-2 사증 소지자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사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F-4 사증 소지자는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주권 취득 문호가 고숙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는 물론이고, 방문취업 사증 소지 외국국적동포, F-4 사증 소지자, 등까지 확대된 결과, 영주자 수는 2012년에는 84,140명으로 증가하였고 출신국도 매우 다양해졌다.

### Ⅲ. 이민자 유입 원인 분석

한국사회에 유입된 출신국별 이민자 수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표 1>에 제시한, 한국으로 이민자를 보내고 있는 29개국을 대상으로 그 핵심 변수를 찾아보기로 한다. ‘국제인구이동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자원은 배출-흡인이론으로 대표되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세계체계이론 등의 역사·구조적 접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간 발전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연결구조의 형성’은 이민자에게 이동 원인을 제공하고 이동 통로를 마련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1. 연구모형

필자는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역사·구조적 접근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핵심변수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각각의 설명변수들과 이민자 수의 상관계수를 통해 그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송출국과 한국의 소득 격차, 송출국의 소득 분배, 경제 성장률, 송출국과 한국의 취업 기회 격차, 공간적 거리, 문화적 거리 변수들은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에서 도출한 것이고, 해외직접투자, 상품 교역, 인적 교류, 재외동포 변수들은 역사·구조적 접근에서 끌어낸 것이다. 그 각각의 설명 변수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통계적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송출국에서 이민자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데 영향력 미친 변수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 엄밀한 통계 모형에 근거한 인과관계 입증은 목표로 하지는 않음을 밝혀둔다.

## 1) 신고전경제학적 접근

사회학의 배출-흡인이론은 노동력 송출국의 '저소득'과 '적은 취업기회' 및 '출국의 용이성'을 배출 요인으로, 유입국의 '고소득'과 '많은 취업기회' 및 '입국의 용이성'을 흡인요인으로, 양국간의 '이동거리'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송출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잉여노동력 규모가 많을수록,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취업을 장려할수록; 유입국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력 부족 정도가 심할수록, 입국이 쉬울수록; 양국간의 이동거리가 가까울수록 국제인구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경제학의 비용-편익 분석은 그것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유사한 변수를 제시한다.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국제인구이동은 이민자 개인이나 가족이 이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그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진다. 편익 측면을 보면, 이주대상국과 송출국 간의 소득격차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송출국과 이주대상국의 실업률 또한 이민자의 예상 편익을 높인다. 비용 측면을 보면, 지리적 거리로 인한 교통비용이 이주 자체에 대한 비용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언어, 문화, 종교와 같은 문화적 거리는 이주 후 취업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수준:** 배출-흡인이론과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하는 변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송출국과 한국의 소득격차다. 각국의 1인당 소득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는 임금수준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1인당국민총생산(국민1인당GDP)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과 송출국의 소득 격차가 양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이민자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개발국 사람이 한국에 이주할 경우 본국에서 더 높은 소득을 획득하는 게 예견된다. 또 저개발국 정부도 자국민 해외 이주자의 송금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적어도 규제를 가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렇지만 소득 격차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 수준에서 볼 때, 한국과 본국에서 자신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본국과 한국의 국민1인당GDP가 음의 값을 가져도 이민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자신의 노동력 가치가 높게 평가 받을 경우, 예컨대, 미국인 학사학위 소지자가 영어 회화 강사를 할 경우 미국보다 한국에서 그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된다. 그 경우, 미국과 한국의 국민1인당 GDP 격차는 음의 값을 기록할 것이지만, 자신의 기대소득은 훨씬 높아지므로, 이주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면 전반적 기대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면 개인의 노동력 가치가 한국에서 더 높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소득분배:** 소득과 인력송출과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다. 이주자는 이주 과정 자체를 포함하여 상당한 초기 비용 지출을 동반하므로, 본국에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재정제약(financial restraints) 때문에 같은 송출국 내부에서도 최빈곤 가구나 계층보다는 중저소득 가구나 중저소득 계층에서 이주를 더 많이 선택한다. 이점을 고려하며, 필자는 '가구소득분배'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의 두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 두 개의 변수는 다른 이론을 함축하고 있다.



전자는 지니 계수로 측정한 것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양상을 가리키는 바, 극빈층에 국한하기보다는 중저소득 계층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한다. 후자는 극빈층 인구의 비율을 반영한다. 극빈층은 소득 격차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이주 가능성이 높지만, 이주의 재정제약을 크게 받을 경우 이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기존 연구 성과는 중저소득 가구나 계층에서 더 많이 국제이주를 선택함을 보고하고 있다.

**경제성장:** 시간적 추이를 고려해보면 송출국의 저소득 가구나 계층에서는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국제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저개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면 국제인구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 이민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다. 물론, 그 나라의 평균 소득과 한국의 소득 수준 격차가 이민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때 의미 없을 정도로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은 이민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결국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송출대상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여전히 높으나, 송출국의 소득증가로 인해 이주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층이 확대되어, 국제이주는 증가할 수 있어, 소득증가와 이민 규모는 종 모양(bell-shaped)의 관계를 갖는다. 소득과 이민 규모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경제성장률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이민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취업기회:** 국제인구이동은 사람들이 노동력 과잉인 사회에서 부족한 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송출국의 노동력(labor force)의 규모, 노동력참가율, 실업률은 그 나라 노동시장 상황과 취업 기회를 반영한다. 그런데 국제이주와 취업기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코 국내와 외국의 취업기회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 기회 변수들의 효과는 종종 상반된 방향으로 해석된다.

생산연령인구 중에서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노동력 혹은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력 인구가 많을수록 해외 송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할 경우, 그 나라의 노동력 규모보다 더 많은 수요, 즉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 규모는 취업 기회를 나타내는 여러 개 지표 중 하나로 고려하되,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노동력 규모와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 생산연령인구 중에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력참가율이 있다. 송출국에서 노동력참가율이 높을수록 취업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출국의 풍부한 취업 기회는 국제이주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지만 이주의 재정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 취업을 촉진할 수도 있다. 기존 연구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해외 이주가 주는 매력을 고려할 때 국내 취업 기회란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제 취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의 비율을 취업률, 그렇지 못한 사람 수의 비율을 실업률이라 한다. 실업률은 노동력 공급규모와 고용 흡수능력의 함수이다. 한 나라에서 노동력 과잉여부는 실업률로 확인할 수 있다. 실업률은 국제이주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송출국에서 실업률이 높을 경우 개인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일자리를 탐색하도록 하므로, 이민 규모를 확대한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높을 경우, 빈곤층의 비율을 증가하게 만들어 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적 제약을 넘기 힘든 계층을 양산하여 오히려 이민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공간적 거리:** 배출-흡인이론은 두 나라 간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 국제인구이동 규모가 클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필자는 각국의 수도 또는 그에 버금가는 대도시에서 한국으로 오는 대한항공 편도 항공료로 공간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항공료는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승객 수 등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국제인구이동의 초기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거리보다 공간적 거리의 지표로 더욱 적합하다. 송출국과 한국의 거리가 짧을수록, 다시 말해 항공료가 낮을수록 이민자들이 훨씬 용이하게 이민을 선택할 것이다. 공간적 거리는 한국 입국의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므로 입국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할 수도 있다.

**문화적 거리:** 송출국 국민들이 한국 문화에 대하여 느끼는 친밀성 또는 거리감을 문화적 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적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통의 종교 등을 흔히 고려하지만, 한국은 종교 다원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기독교, 불교 등 특정종교 신자뿐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서, 종교는 문화적 거리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로 볼 수 없다. 필자는 대안적 지표로 송출국에서 흔히 한류라 일컬어지는 한국문화에 대한 대중적 열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문화적 거리 지표로 설정하였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2011)에서 한류 지수를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 조사 결과라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각국별 유튜브에 올려진 가수 사이의 쥬플랜 동영상 조회 건수를 측정하였다. 각국의 인터넷 보급 비율 등 한류와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자료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29개국의 자료를 빠짐없이 제시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반 이용자가 YouTube에 접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치 5,644를 추정치 3,538,725로 대체하였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1: 7)이 측정한 한류 지수에서 중국의 음악분야 한류 지수는 대만보다는 높고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과 대만의 중간값을 부여하였다. 문화적 거리가 짧을수록, 다시 말해 송출국에서 한류 열기가 높을수록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문화적 거리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열망의 정도뿐 아니라 부담감의 정도를 반영하므로, 입국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할 수도 있다.

〈표 2〉 설명변수들의 기술통계

이론적 개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고전파경제학적 접근	소득수준				
	소득분배				
	국민 1인당GDP (구매력기준: US\$)	16,558.6	16,556.2	1,300	50,700
	가구소득분배(지니 계수)	37.3	6.3	27	53
경제성장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7.9	10.2	1.5	41.0
	GDP성장률(%)	4.5	3.4	-1.9	12.3
	노동력(백만명)	77.3	166.0	0.4	798.5
	노동력참가율(%)	63.5	9.4	45	84
공간적 거리	실업률(%)	8.1	8.2	0.3	46.0
	편도 항공료(원)	958,572.4	472,242.4	339,000	1,732,700
	문화적 거리	2,738,210.0	4,239,806.9	696	21,158,241
	한류(유튜브 조회 건수)				
역사적-구조적 접근	해외투자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백만US\$)	5,277.8	10,902.3	19	44,518
	무역 (수출+수입; 천US\$)	23,469,756.0	45,066,435.1	20,783	215,107,159
관망	수출(천US\$)	12,434,738.6	26,594,877.4	9,907	134,322,564
	수입(천US\$)	11,035,017.5	19,561,931.4	211	80,784,595
	한국인 방문자(천명)	553,981.1	1,248,298.8	144	5,921,284
	외국국적동포(명)	134,911.9	388,509.9	0	1,830,929

## 2) 역사·구조적 접근

세계체계이론은 이민 송출국과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사회경제적 연결구조를 강조한다. 두 나라 사이의 물질적 연결구조와 문화, 이데올로기적 연결구조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방향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해외직접투자, 상품교역, 인적 교류, 해외이민, 해외 식민지 경영 등이 대표적이다. 즉 해외투자 규모가 클수록, 상품수출 규모가 클수록, 국민의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일수록, 과거 식민지였던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보다, 이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은 식민지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앞의 네 가지 요인만 변수로 포함하기로 한다.

**해외투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뚫기 위한 시장진출형투자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임절감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투자 모두 한국과 투자대상국 간의 사회경제적 연결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를 지닌다. 해외투자액의 절대규모가 여러 투자대상국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동일한 투자액이 현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각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의 해당국에 대한 투자 금액으로 측정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이민송출국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연결구조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각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현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제무역:** 상품 이동이 두 나라 사회를 이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대체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상품 이동도 원활하겠지만, 그 역명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품이동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자본이동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상품의 현지 수출, 외국 상품의 수입, 그리고 그 둘을 합한 국제 무역 총액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상품 교역 금액이 클수록 그 나라와 한국 사이의 사회적 연결 구조는 공고하고, 결국 그 나라 국민의 한국 이주 가능성을 높인다.

**관광:** 두 사회간 인적 교류는 사회경제적 연결구조를 직접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연결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적 교류는 해외직접투자나 상품교역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광, 여행이나 방문 등 단순한 인적 교류를 포함하기도 한다. 인적 교류의 확대는 한국인과 그 나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접면이 넓어졌고, 또 그것의 깊이가 심화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를테면, 태국은 한국인들이 신흥여행 대상국으로 가장 선호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그로 인해 한국과 태국 사회는 훨씬 강고한 연결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외동포:** 세계체계이론은 역사적 경험, 특히 식민 종주국과 피 식민국의 관계, 공동의 피 식민 지배 경험, 외국 군의 자국 주둔 등을 근거로 국제이주가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센(Sassen, 1988)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내 이민자의 송출국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한국이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그러한 변수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 식민 지배 경험이 남긴 유산으로,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였던 사람들의 후손이 현재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구체적으로 말해 1960년대 이후 한국인의 해외진출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듯이, 한국 정

부가 재외동포 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정착한 한국계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와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그 나라 사람들의 한국 이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해외에 정착한 한인들의 존재는 그들과 한국사회를 잇는 사회적 연결구조를 의미한다. 그것은 귀환이주의 통로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나라 국민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려 할 경우 이주 경로와 절차, 한국 내 취업과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도착 이후 취업 알선과 숙식 지원 등을 각종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주 비용을 낮추어, 이민 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 3) 자료와 변수의 측정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역사·구조적 접근에서 도출한 10개의 이론적 개념들을 15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그것을 <표 2>에 간단히 제시하였다. 그 변수값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하였다. 먼저, 신고전경제학적 측면의 변수들로, (1) '국민1인당GDP'(미국달러\$), (2) '가구소득분배'(지니계수), (3)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4) 'GDP 실질 증가율'(%), (5) '노동력' (백만명), (6) '노동력참가율'(%), (7) '실업률' (%)은 CIA의 World Factbook 2013에서 찾았고, (8) 공간거리(항공료; 원)는 대한항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하였으며, (9) 한류(YouTube 조회건수)는 연합뉴스의 블로그에서 발견하였다. 다음, 구조 측면의 변수들로, (10) 해외직접투자(백만달러)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사용하였고, (11) 무역(수출+수입, 천달러), (12) 수출(천달러), (13) 수입(천달러)는 한국무역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값을 찾았으며, (14) 한국인 해외방문자 수(명)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15) 재외동포 수(명)은 외교부의 재외동포통계에서 찾았다. 이 연구의 모형은 독립변수들간의 통계적 독립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분산을 표준화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은 거치지 않은 채 원자료 그대로 제시하였다.

## 2. 상관관계 분석

한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의 출신국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요 29개국 출신의 이민자 분포를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는 외국인 이민자 수 또는 그 부분 집단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를 보면,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과 구조변수들이 골고루 출신국별 이민자 수 분포 차이를 설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외투자, 상품교역, 인적교류, 재외동포 등의 역사·구조적 변수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 노동자, 또는 E-9 사증 소지자 수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이민자 집단의 출신국별 분포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출신국별 이주노동자 쿼터는, 한국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체결한 MOU에 바탕을 두고 운용되는데, 국내 사용자의 출신국별 선호와 한국정부가 송출국정부와 맺은 외교적, 정치적 고려사항 등에 기초하여 설정한

다.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역사·구조적 변수의 효과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고용허가제는 시장 메커니즘 또는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하여 이주노동자를 충원하는 제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투자, 상품교역, 인적교류, 재외동포라는 역사·구조적 변수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한 국제인구이동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효과를 지닌다.

신고전경제학적 변수 중에서 모든 이민자 집단의 출신국별 분포에 대하여 완벽하게 일관된 효과를 보이는 세 변수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나머지 둘은 전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송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다시 말해 ‘가족소득의 지니 계수’ 값이 큰 나라일수록 한국내 이민자 수가 많다. 이는 이민자들이 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높은 소득 또는 삶의 기회를 발견할 경우 이민을 선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이민자 부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 3〉 이민자 인구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표

	전체		이주노동자					정착이민자			
	(1)	(2)	(3)	(4)	(5)	(6)	(7)	(8)	(9)	(10)	(11)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											
국민1인당GDP (구매력기준: US\$)	-0.097	-1.82	-2.09	-.489***	-.091	-.221	.396*	.015	-.138	.106	.009
가구소득분배(지니 계수)	3.78*	3.95*	3.85*	2.46†	3.07†	4.55**	376*	3.49*	3.22*	3.51*	2.89†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27	-.109	-.106	-.077	-.087	-.110	-.123	-.146	-.130	-.129	-.167
GDP실질성장률(%)	.218	.270†	.281†	.336*	.196	.306†	-.070	.146	.188	.112	.127
노동력(백만명)	820***	805***	.796***	-.062	.833***	.751***	.565**	.823***	.690***	.814***	800***
노동력참가율(%)	.232	.259†	.263†	.407*	.171	.257†	.039	.194	.278†	.154	.125
실업률(%)	-.066	-.059	-.059	-.011	-.040	-.111	-.036	-.072	-.107	-.043	-.072
원도 환공(원)	-.320*	-.369*	-.387*	-.496**	-.257†	-.433**	.140	-.250†	-.382*	-.109	-.322*
환율(유로:브 조화 건수)	.140	.072	.029	-.101	.031	.097	800***	.224	.117	.338*	.063
역사적-구조적 변수들											
해외직접투자 (백만US\$)	.719***	.661***	.627***	-.037	.646***	.613***	.949***	.778***	.601***	.864***	.624***
무역 (수출+ 수입; 천US\$)	.842***	.791***	.771***	-.104	.815***	.737***	.742***	.892***	.749***	.891***	.848***
수출(천US\$)	.911***	.867***	.848***	-.051	.879***	.817***	.767***	.949***	.803***	.948***	.894***
수입(천US\$)	.702***	.643***	.623***	-.169	.682***	.587***	.667***	.765***	.634***	.762***	.740***
한국인 방문자(천명)	.847***	.815***	.803***	-.041	.824***	.796***	.597***	.871***	.791***	.822***	.855***
외국국적동포(명)	.862***	.812***	.787***	-.128	.841***	.739***	.840***	.911***	.705***	.965***	.823***

주: (1) 전체 이민자 = (2) + (6)  
 (2) 이주노동자 = (3) + (7)  
 (3) 저숙련 이주노동자 = (4) + (5) + (6)  
 (4) 고용허가제 동 이주노동자  
 (5) 방한허가제 이주노동자  
 (6)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7) 고숙련 이주노동자  
 (8) 정착이민자 = (9) + (10) + (11)  
 (9) 결혼이민자  
 (10) 해외동포 사증(P-4) 소지자  
 (11) 영주자

통계적 유의수준: † < .10 \* < .05 \*\* < .01 \*\*\* < .001, N=29.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과 ‘실업률’은 모든 이민자 집단의 출신국별 분포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버는 빈곤층과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이주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한국에 이주노동자 또는 정착이민자로 오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집단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으로의 이민은 송출국 사회의 극빈층이 아니라 중저소득 계층 또는 중간소득 계층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은 이민자 부분 집단별로 제 각각 다른 효과를 미친다. 그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송출국의 '국민1인당GDP'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사증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분포와 관계 있다. 국민1인당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한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더 많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이주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큰 나라에서 주로 충원하고 있다. 고숙련 이주노동자는 반대 방향의 효과가 확인된다. 국민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한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더 많다. 선진 기술이나 지식 또는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경제 수준이 발전한 선진국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

다.

둘째, 경제성장률, 다시 말해 실질 GDP 증가율은 이주노동자 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E-9 사증 이주노동자,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저숙련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전체의 출신국별 분포는 경제성장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다. 송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이 범주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많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국민이 해외이주 비용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역사·구조적 변수의 효과, 즉 한국과 송출국 간의 경제적 연결구조가 탄탄히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H-2 사증 이주노동자 수의 분포는 송출국의 경제성장률과는 무방하다.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상 출신국의 경제성장률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고숙련 이주노동자와 정착이민자의 출신국별 분포도도 송출국의 경제성장률과는 관련이 없다.

셋째, 송출국의 ‘노동력 규모’는 E-9 사증 소지자 수의 출신국 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다른 모든 이민자 집단의 출신국 분포에는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동력 규모가 큰 송출국 출신, 예컨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인구대국 출신 이민자 수가 국내 이민자 중 상대적으로 다수를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국의 노동력 인구가 많을수록 한국의 이민자 수도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때 중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MOU의 필요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MOU 체결을 연기하였고, 중국에 할당할 예정이었던 이주노동자 도입 쿼터를 다른 나라에 할당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고용허가제는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정부 주도의 이주노동자 도입 프로그램이다.

넷째, ‘송출국의 노동력 참가율과 국내 이민자 수의 상관관계’는 ‘실질 GDP 증가율과 국내 이민자 수의 상관관계’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E-9 사증 이주노동자,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저숙련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전체,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분포는 경제성장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다. 노동력 참가율이 높을수록 이 범주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 수가 많다. 송출국에서 해외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가장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력 참가율이 높은 사회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송출국과 한국 간의 공간 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민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거리가 멀수록 이민자 수가 적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고숙련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사증 소지자의 경우, 공간거리와 이민자 수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여섯째, 송출국과 한국 간 문화적 거리는, 놀랍게도, 공간적 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출신국에서 한류 열기가 높을수록 이 두 범주의 경우 한국 내 이민자 수가 많다. 고숙련 이주노동자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을 이주의 목적지로 선택하게 된 배경에, 한류의 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한국계 외국인이 F-4 사증을 받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게 된 배경에는 한류를 통해 문화적 거리가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이다.

## IV. 결론

한국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를 수용하여 왔고, 그에 따라 그들의 출신국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게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연구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운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을 이민자 전체와 부분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들을 꼽아 보면서 정리하기로 한다. 출신국별 한국 내 전체 이민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해외투자, 상품교역, 인적교류, 재외동포라는 역사·구조적 변수들과 함께, 가족소득분배, 노동력 규모, 공간적 거리다.

이주노동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네 개의 역사·구조적 변수들과 더불어 가족소득분배, 실질GDP증가율, 노동력 규모, 노동력 참가율, 공간적 거리다. 출신국별 저숙련 이주노동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이주노동자 전체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주노동자 중 대부분이 저숙련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E-9 사증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다른 집단과 뚜렷이 대조된다. 네 가지 역사·구조적 변수들이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대신, '국민1인당GDP', '가구소득분배', 'GDP 실질 증가율', '노동력참가율', 공간거리라는 다섯 개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방문취업 사증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네 개의 역사·구조적 변수들, '가구소득분배', '노동력', 공간거리라는 세 개의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이다. 서류미비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분포는 네 개의 역사·구조적 변수들, '가구소득분배', 'GDP 실질 증가율', '노동력', '노동력참가율', 공간거리라는 다섯 개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

출신국별 고숙련 이주노동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네 개의 역사·구조적 변수들과 더불어 '국민1인당GDP', 가족소득분배, 노동력 규모, 문화적 거리의 네 가지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다.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문화적 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착이민자의 국적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네 개의 역사·구조적 변수들, 그리고 가족소득분배, 노동력 규모, 공간적 거리의 세 가지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이다. 출신국별 영주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정착이민자 전체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정착이민자의 경우와 유사한데, '노동력 참가율' 가 한 가지 더 추가된다는 점이 다르다. 재외동포 사증 이민자의 국적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네 개의 역사·구조적 변수들, 그리고 가족소득분배, 노동력 규모, 문화적 거리의 세 가지 신고전경제학적 변수들이다. 공간적 거리 대신에 문화적 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발견을 비유를 통해 한 마디로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민자 송출국과 한국 사이에 사회적 연결구조가 만들어져 마치 고속도로처럼 이민자의 유입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민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그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다양한 종류를 자동차를 선택하여 타고 온다. 고용

허가제 이주노동자처럼 한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그 분포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유형의 이주노동자들과 정착이민자들처럼 시장 메커니즘 또는 시민사회 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 출신국별 규모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요인을 전제한 후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을 뜻한다.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역사·구조적 접근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당연히 그 이론에서 제시하는 전망을 종합적 관점에서 결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Castles, Stephen. 2005. "Hierarchical Citizenship in a World of Unequal Nation-State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4): 689-692.
- Held, David, Anthony McGrew, David Goldblatt, and Jonathan Perraton. 1999.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KOFICE). 2011. *Economic Impact of Korean Wave 2010: Including the Korean Wave Index 2010*. Seoul: KOFICE. (In Korean)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2013.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Korean)
- Kwak, Jay Seok, and Dong-Hoon Seol. 2010. *Working Life of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in Korea and Their Supporting Plan*. Seou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n Korean.)
- Lee, Everett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47-57.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ol, Dong-Hoon. 1999. *Foreign Workers in Korean Society, 1987-1998*.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n Korean)



- Seol, Dong-Hoon. 2000. *Global Capitalism and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n Korean)
- Seol, Dong-Hoon. 2008. *Korean Employers' Differential Preferences for Migrant Workers according to the Country of Origin under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 Workers: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Alternatives*. Gwacheon: Ministry of Labor.
- Seol, Dong-Hoon. 2010a. "Which Multiculturalism? Discourse of the Incorporation of Immigrants into Korean Society." *Korea Observer*, 41(4): 593-614.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4.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Pp. 475-513 in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sup>nd</sup> Edition, edited by Wayne A. Cornelius,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9a. "Why Is There So Little Migrant Settlement in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3): 578-620.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9b.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Oh, Yoon Ah, Jai-Joon Hur, Daechang Kang, Yoomi Kim, and Mingeum Shin. 2012. *Southeast Asian Labor Migration to Korea: Origin-Country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 Korean)
- United Nations. 2001.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 Woo-Cumings, Meredith (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Yamanaka, Keiko. 2003. "Feminized Migration, Community Activism and Grassroots Transnationalization in Japa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2(1/2): 155-187.



# 논문발표 Session 3

## Session 3: 한국국가의 국제화

사회자: 하태형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 한국국가의 국제화

- 발표자: 한충민 교수(한양대)
- 토론자: 어윤대 교수(고려대), 강인선 부장(조선일보)



# 한국국가의 국제화

한 충 민

한양대학교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y 29, 2014

## Brand Korea 평가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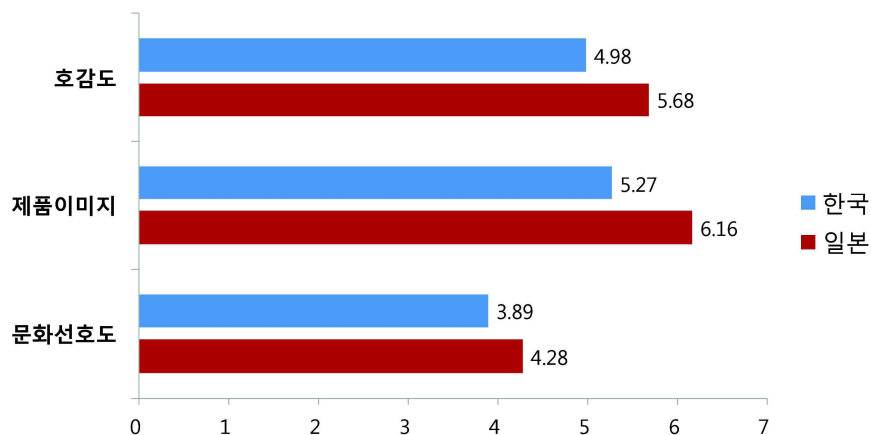
2014. 5.

한국국제경영학회 발표자료

한충민 (韓 充 敏, 한양대)

cmhlab@hanyang.ac.kr

### Brand Korea 현황



- 28개국 온라인 조사, 국가별 남녀 각각 100명
- 일본에 비해 아직 큰 격차를 보임.
- 한국 제품 이미지 > 국가호감도 > 한류 선호도

©한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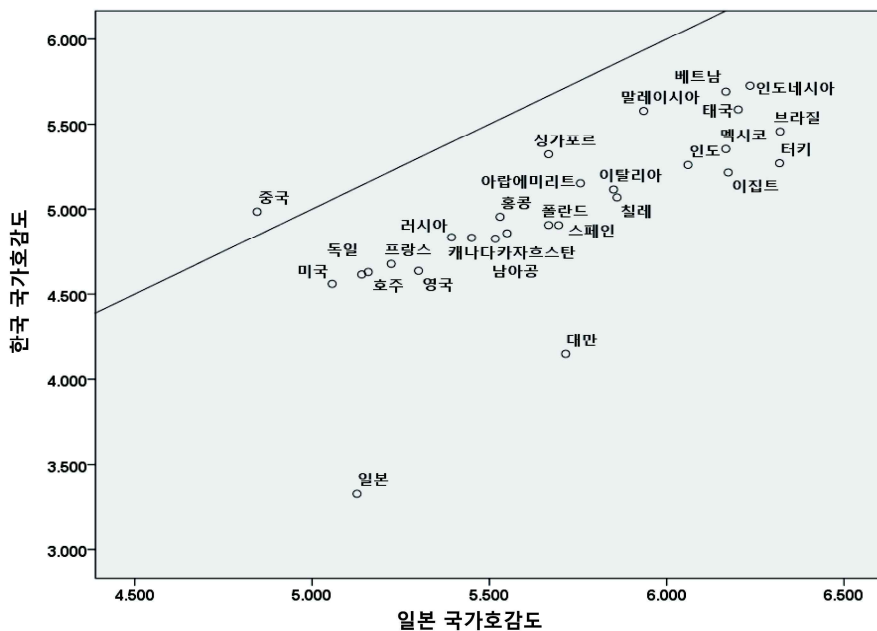
## Brand Korea vs. Brand Japan

- 한국의 이미지가 일본의 이미지에 비해 전세계 국가에서 낮음. 중국은 예외.
- 특히 한국 제품 이미지가 일본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한국 문화 선호도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음.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문화 선호도가 일본 선호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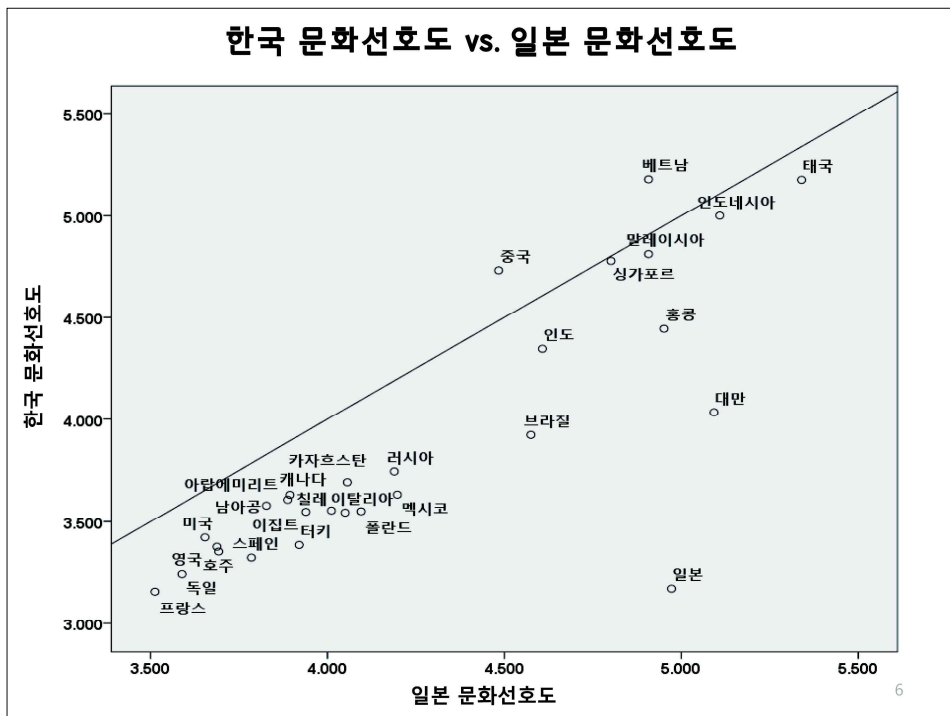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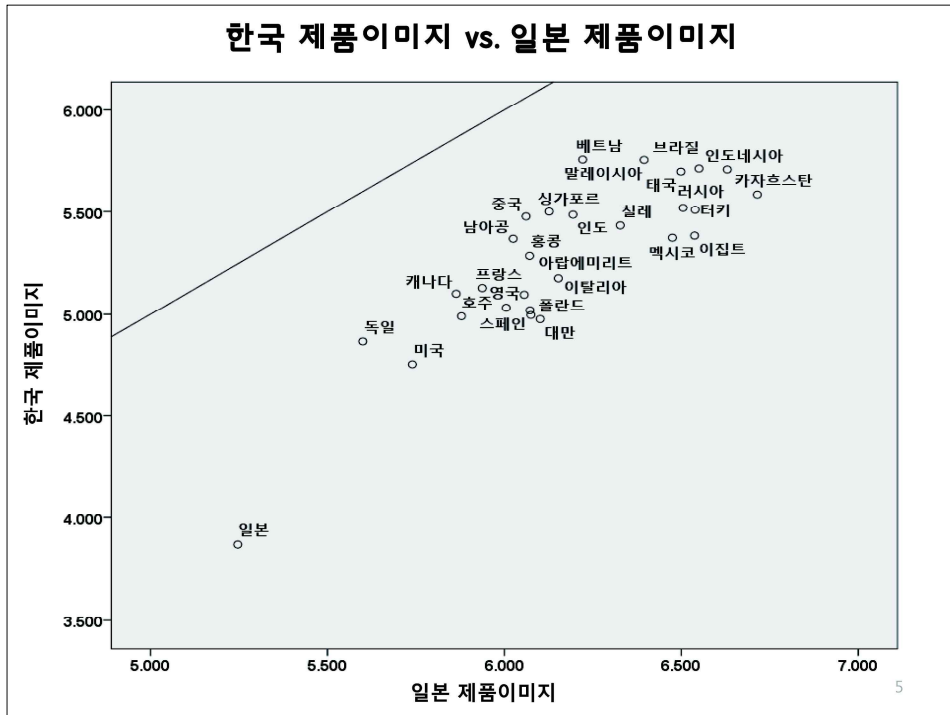
©한충민

3

### 한국 국가호감도 vs. 일본 국가호감도



4





## 한국 이미지 국가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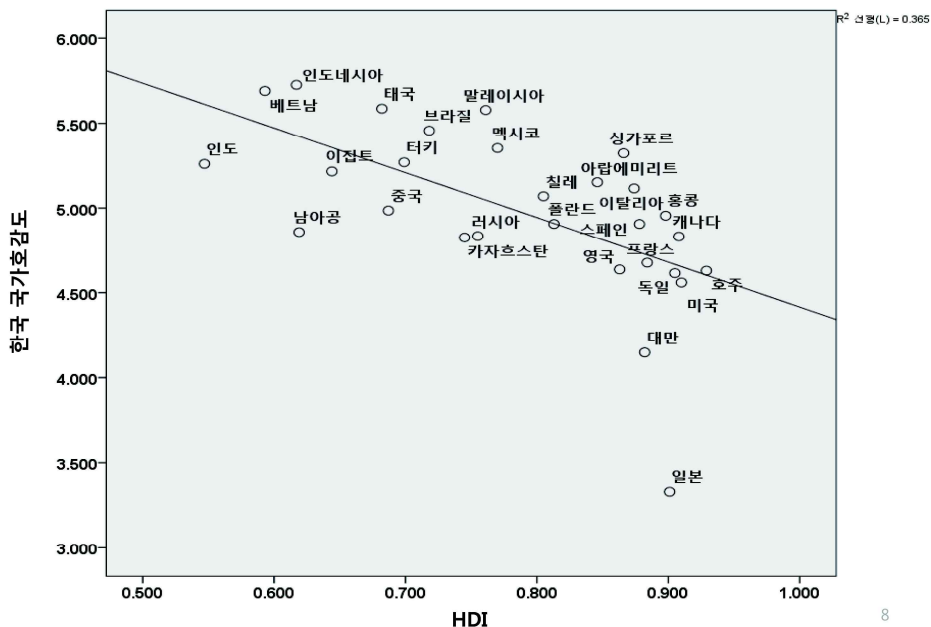
- 국가호감도 – 개도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국가에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제품 이미지 – 개도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국가에서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한류선호도 – 개도국과 지리적 거리가 짧은 국가에서 한류를 선호함.

- ❖ 문화적 거리: Kogut-Singh Index
- ❖ 지리적 거리: 국가 수도간의 항공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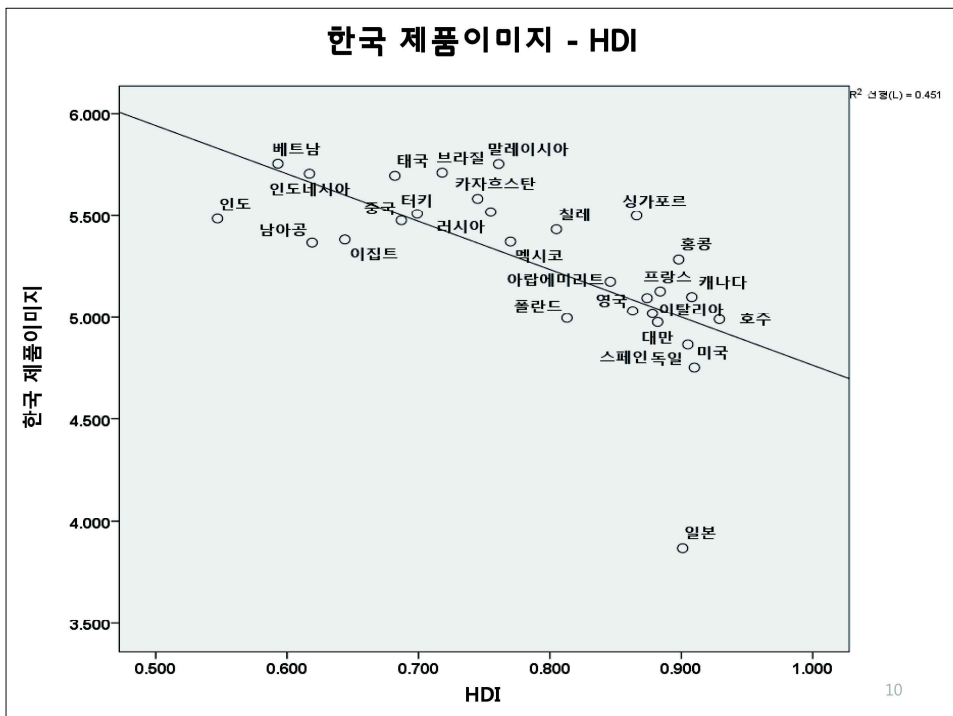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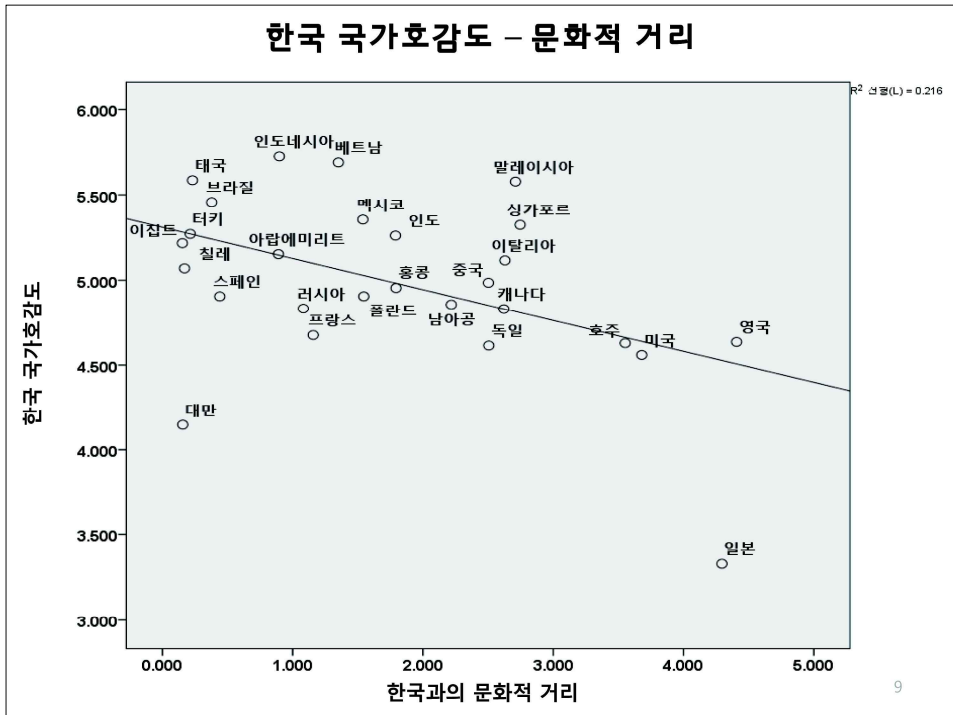
©한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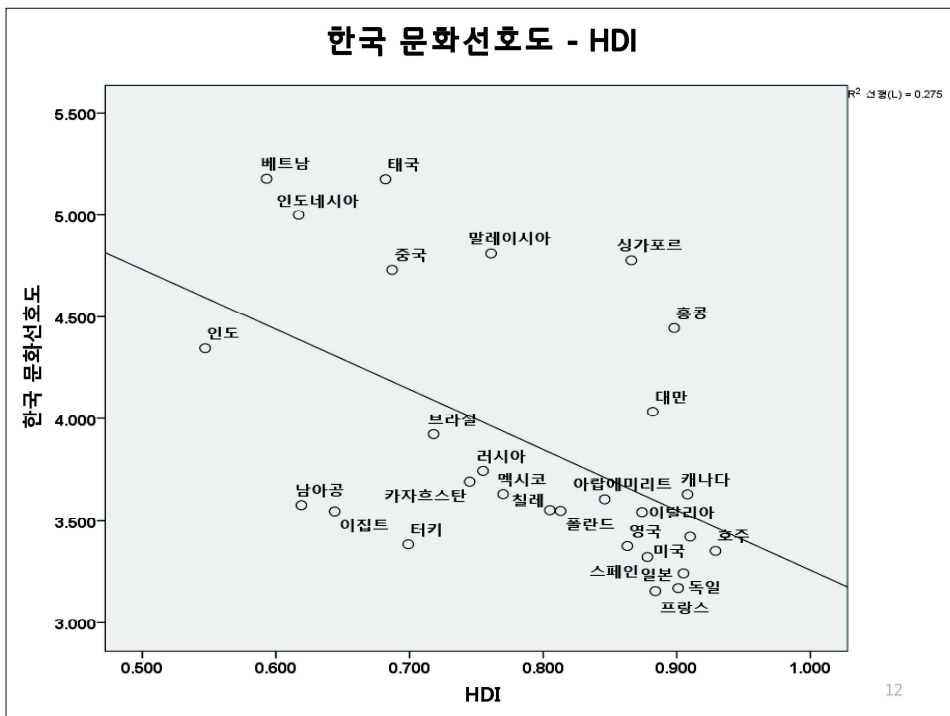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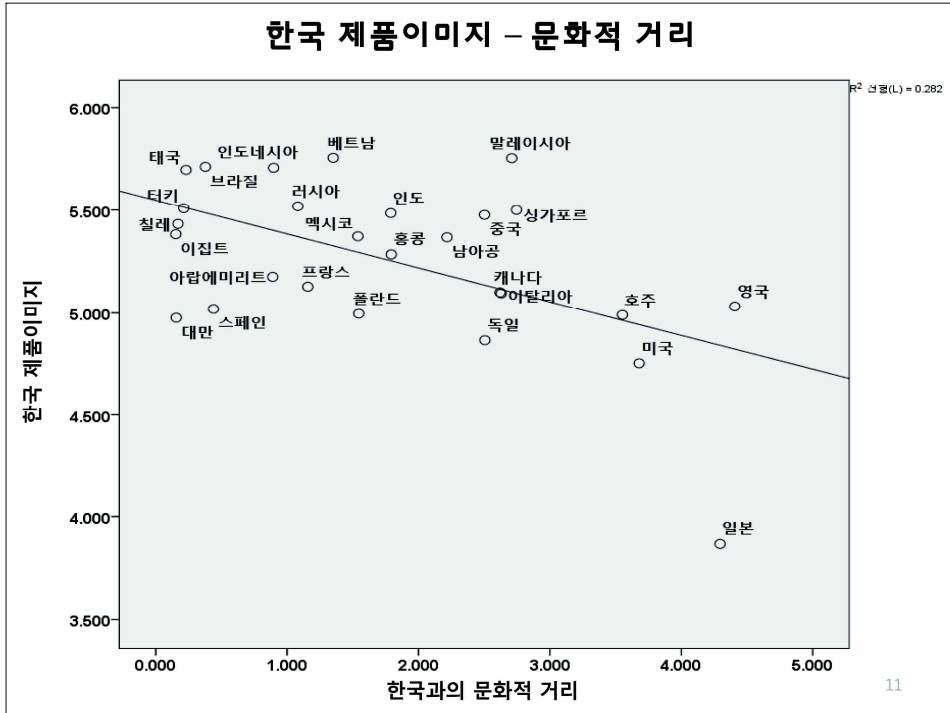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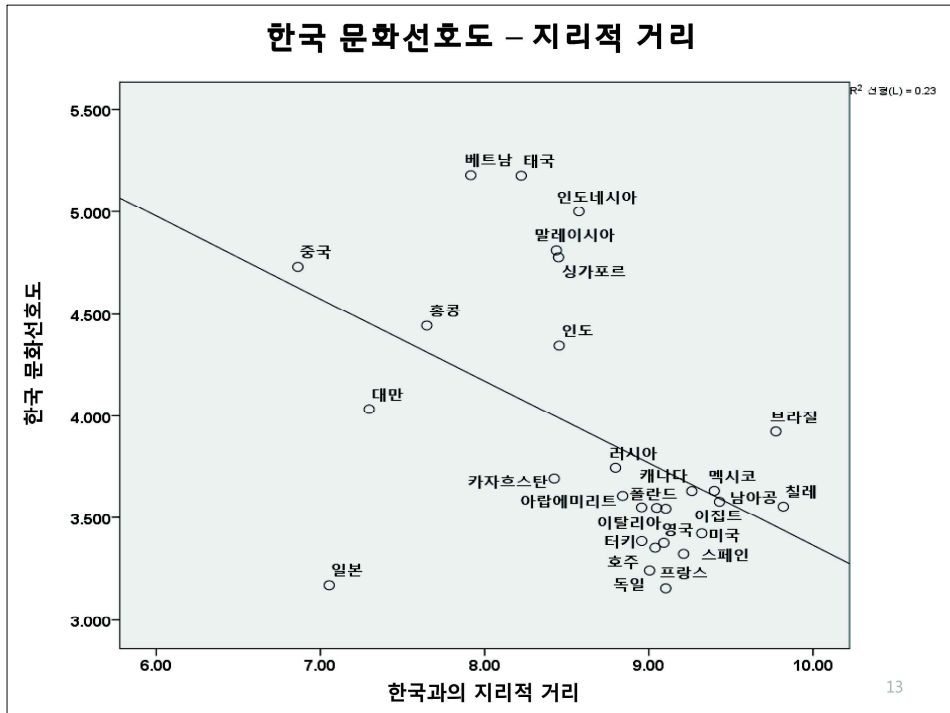
### 한국 국가호감도 - HDI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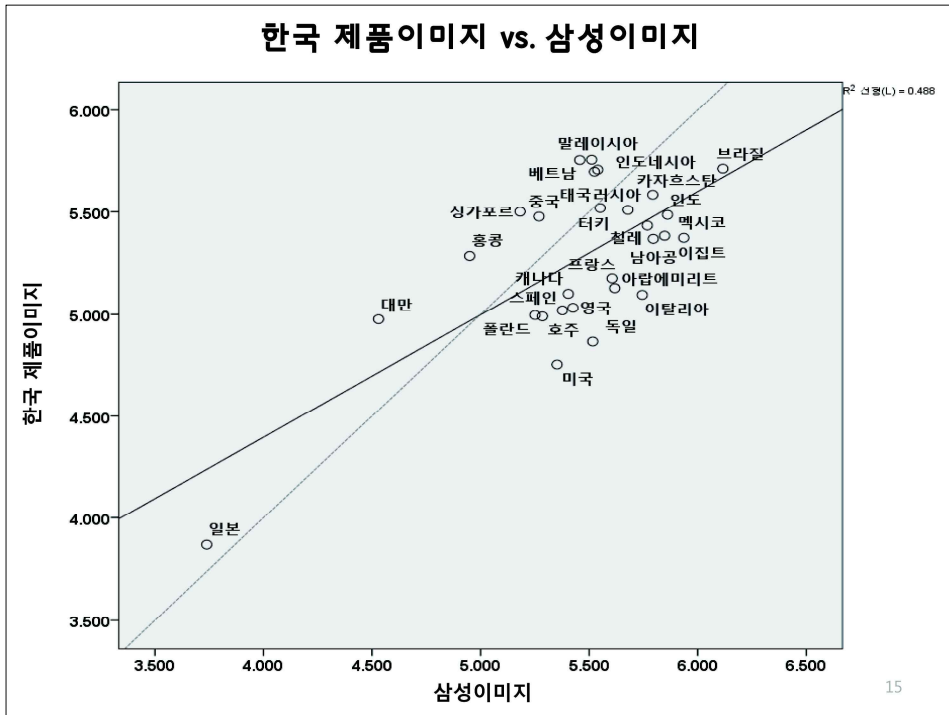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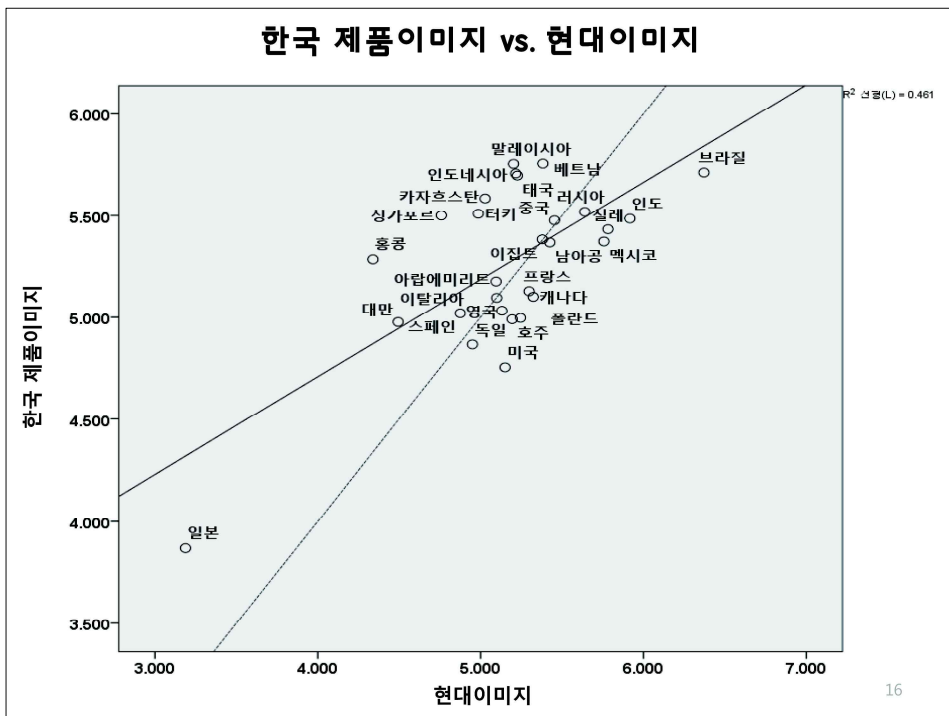


## 삼성과 현대자동차 이미지

- 삼성 이미지가 한국 제품의 전체 이미지에 비해 우수함. 한편,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는 한국 제품의 이미지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삼성과 현대 이미지와 한국 제품의 전체 이미지와 연관성이 높음.
- 삼성과 현대의 브랜드 원산지를 정인지하는 소비자가 한국 제품에 대해 호의적 이미지를 보임.



15



16

## 삼성과 현대의 지각된 원산지에 따른 한국 제품 이미지 평균

	삼성	현대
한국 브랜드로 인지 (삼성 61.8%, 현대 63.1%)	5.482	5.430
일본 브랜드로 인지 (삼성 23.5%, 현대 22.8%)	5.013	5.062
기타 브랜드로 인지 (삼성 14.8%, 현대 14.0%)	4.803	4.830
F값	161.3*	107.3*

\* 1% 수준 유의, 7점 척도

©한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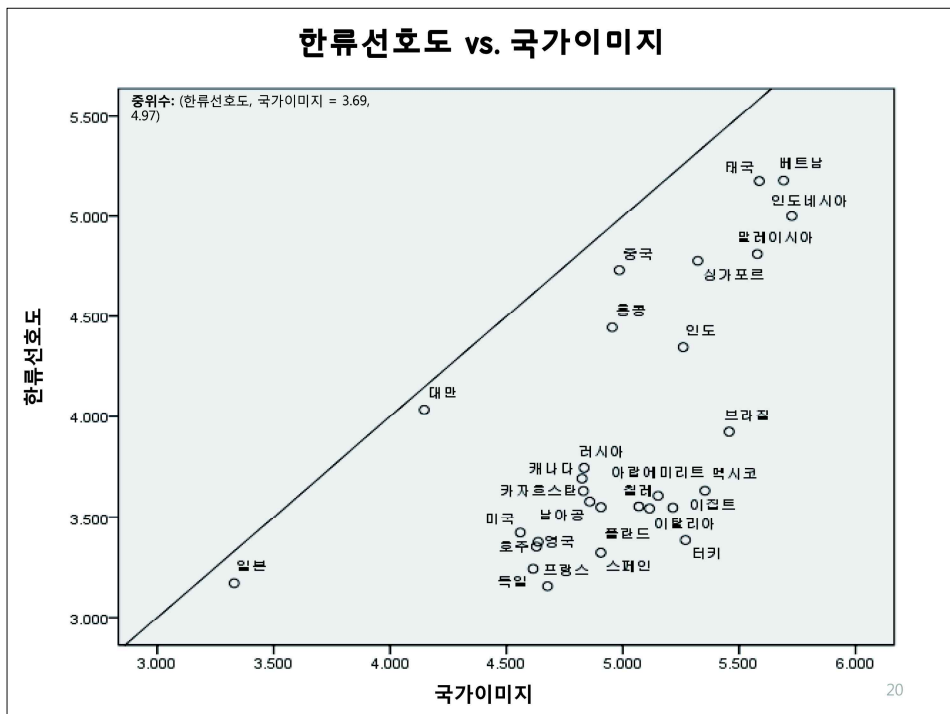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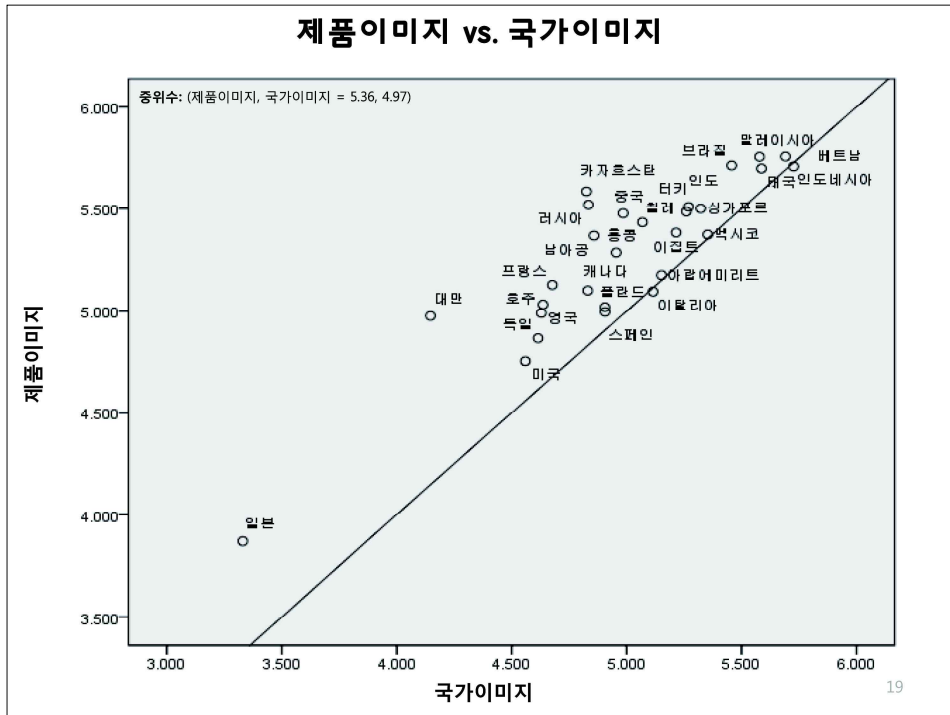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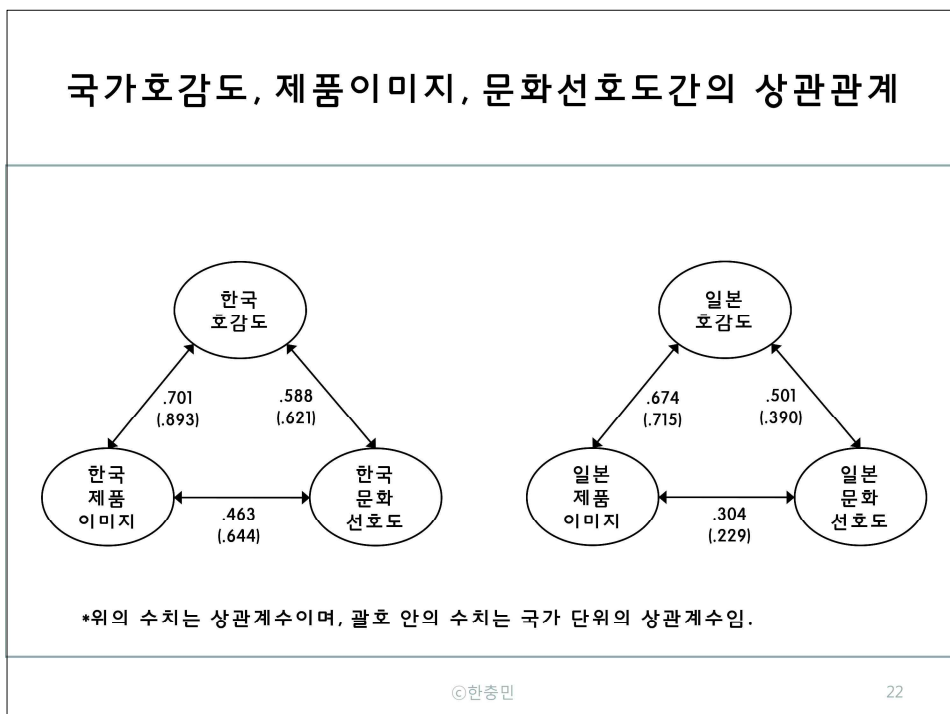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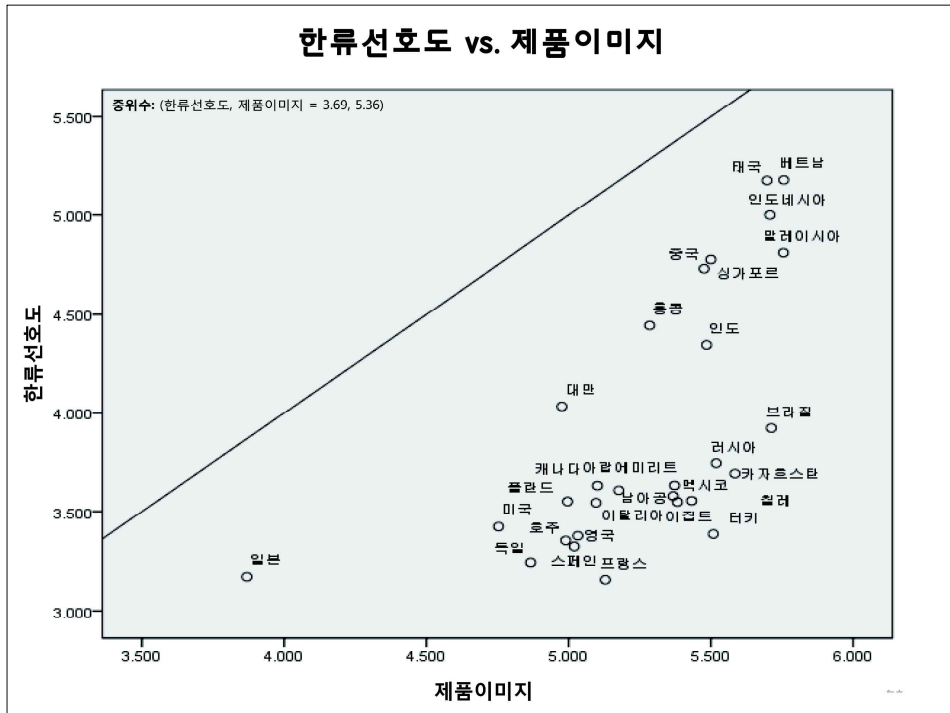
## 국가호감도, 제품 이미지, 한류 선호도와의 관계

- 한국 제품 이미지가 모든 국가에서 국가호감도보다 높음.
- 반면에, 한류 선호도는 국가호감도보다 낮아, 국가호감도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고 있음.
- 모든 국가에서 제품 이미지가 한류보다 호의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 차이는 상당히 큼.
- 상대적으로 제품 이미지가 한류보다 국가호감도와 관련성이 높음.
- 일본에 비해 3자간의 관련성이 높음. 이는 아직 한국의 이미지가 일본에 비해 새로워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

©한충민

18







## Brand Korea의 과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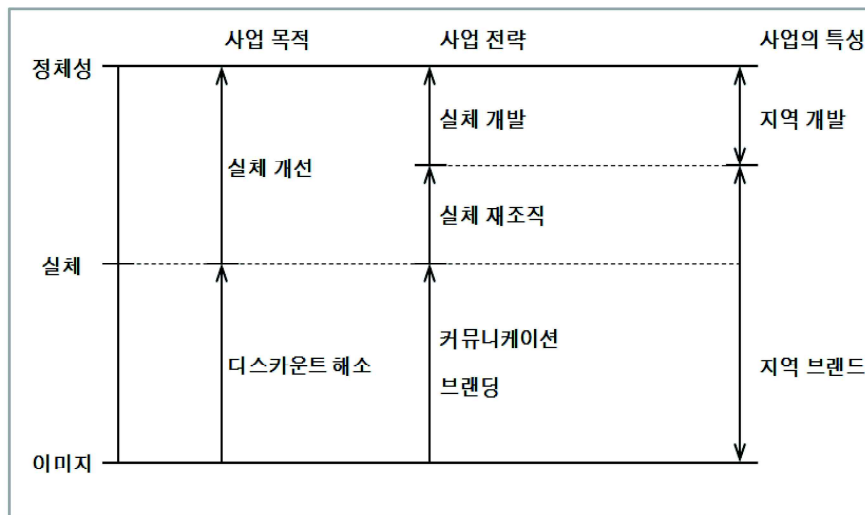
- 국가호감도 제고 방안 - 제품이미지 vs. 한류
- 한류 선호도가 아직 높지 않아, 향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 취약 국가에서의 국가이미지 제고 – 선진국과 문화적 거리 및 지리적 거리가 먼 국가
- 삼성과 현대자동차와의 연계 강화

## 현장의 목소리 – 국가/도시 브랜드 사업



-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돈이 너무 많이 든다.
- 개발 사업 (실체 개선)과 비슷하다.
- 미화 사업과 같다.
- 도시 브랜드 - 국가브랜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 漢江投石과 같다.
- 사업의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 < 국가/도시 브랜드 사업의 형태 >



©한충민

25

## Brand Korea의 과제 (2)

- Korea discount 해소에 주력
- 효율적인 사업 범위 설정
- 단기: Branding과 communications에 초점을 맞춰 전개. 추가적으로 실체 재조직 사업 전개.
- 장기: 실체 개선

©한충민

26

## 참고 문헌

- 한충민·원성빈 (2014), 한국 제품의 해외 이미지 결정 요인: 28 개국 실증 연구, **국제경영연구**, 25, 1, 1-28.
- 한충민·원성빈·김상묵 (2014), 심리적 거리가 한류 선호도와 한국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19, 1, 121-141.
- 한충민·김상묵 (2013), 동남아에서의 한·중·일의 문화 선호도 비교 연구, 한국경영학회 한류미래전략연구포럼, 10월 25일.
- 한충민 (2011),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브랜드: 국가와 도시도 브랜드화가 가능한가**.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건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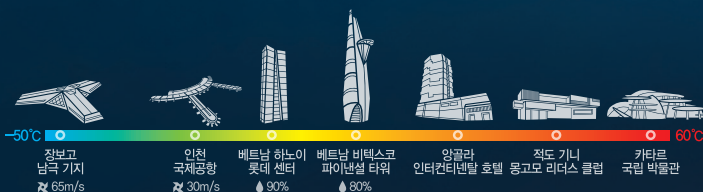
## VS 남극

세계 최고의 시스템 창호, 태양광 발전 기술로  
영하 40도의 혹한, 초속 65m의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보고 남극기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AWS 90.SI+ (Super Insulation)

정밀하게 설계된 고강도 알루미늄 프로파일



**이건창호**는 영상 50°C의 폭염과 강한 모래폭풍이 부는 중동과 적도, 연평균 3회 이상 강력한 태풍이 부는 대한민국, 습도 80~90%를 넘나드는 동남아, 영하 40°C의 혹한과 초속 65m의 강풍이 부는 남극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KT&G에는 4,105명의 펀드매니저가 있다?

1+1  
매칭그랜트

## 행복한 나눔이 2배가 되는 KT&G 상상펀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회사가 똑 같은 금액의 기부금을 조성하는 상상펀드  
KT&G는 4,105명의 임직원이 기부대상자를 선정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 상상펀드 운용계획



# 백두산 천지물 백두산 백산수

백두산 천지물이

화산암반 백 리를 흘러내려

이도백하 전설을 만들었네

백두산 천지물!

백두산 백산수

좋은 물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사세요!



노하우를 아니까!  
트렌드를 아니까!

## 피자 트렌드, 도미노로부터

피자의 새로운 맛,  
시작은 언제나 도미노

### 도미노만의 특별한 피자 노하우!

도우와 토핑의 차이가 피자 맛의 차이를 만듭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저온 숙성 도우



입맛대로 고르는  
다양한 타입의 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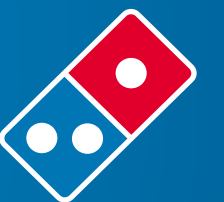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스크린 방식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 토핑



풍부하고 깊은 맛의  
고급 프리미엄 치즈



**Domino's  
Pizza**